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 나수엽 · 임유진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 나수엽 · 임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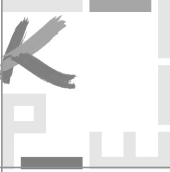
연구자료 18-05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28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법신사 T. 02-720-9786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53-4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 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

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

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 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추적하고 분쟁의 발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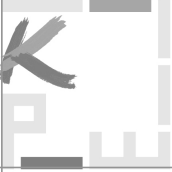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적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싼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례

| | |
|--------------------------------|-----|
| 국문요약 | 3 |
| 제1장 서론 | 15 |
|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 19 |
| 1. 개관 | 19 |
| 2. 중·EU 무역 현황 | 23 |
| 3. 중·EU 투자 | 34 |
| 4. 기타 협력 | 38 |
|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 42 |
|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 42 |
|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 60 |
| 3. 중·EU WTO 분쟁 | 69 |
| 4. 평가 및 전망 | 81 |
|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 87 |
| 1. 분석 방법 | 87 |
|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 91 |
|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 96 |
|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05 |
|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 105 |
| 2. 정책시사점 | 108 |

참고문헌 113

Executive Summary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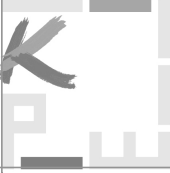


표 차례

| | |
|--|----|
|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6 |
| 표 2-1. 중·EU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 1~7차 주요 내용 | 21 |
| 표 2-2. 2017년 기준 EU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 27 |
| 표 2-3. EU의 대중국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 29 |
| 표 2-4. 2017년 중국의 대EU 수출 10개 품목 | 31 |
| 표 2-5. 중국의 대EU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 33 |
| 표 2-6. 중국의 대EU 해외투자 확대 요인 | 35 |
| 표 3-1. EU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 46 |
| 표 3-2. EU의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주요 반덤핑 규제 조치 현황 | 49 |
| 표 3-3. EU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 분쟁 주요 사례 | 54 |
| 표 3-4.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 55 |
| 표 3-5. 중·EU간 강철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 분쟁 경과 | 59 |
| 표 3-6.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대한 EU와 중국의 입장 | 62 |
| 표 3-7.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65 |
| 표 3-8. EU 반덤핑 개정 및 왜곡보고서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 | 69 |
| 표 3-9. 중국의 WTO 분쟁 추이(2002~18. 6) | 71 |
| 표 3-10. 중국의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 72 |
| 표 3-11. EU의 주요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 72 |
| 표 3-12. EU의 대중국 WTO 제소 | 74 |
| 표 3-13. 중국의 대EU WTO 제소 | 75 |
| 표 3-14.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에 대한 WTO 분쟁(DS460) | 76 |
| 표 3-15. 희토류 WTO 분쟁(DS432) | 78 |
| 표 3-16. 철강 패스너에 대한 WTO 분쟁(DS397) | 80 |
| 표 3-17. 중·EU 주요 통상분쟁 이슈 | 82 |
| 표 4-1. HS 2단위 기준 15개 산업군 분류 | 88 |
| 표 4-2.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 92 |

| | |
|--|-----|
| 표 4-3.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 93 |
| 표 4-4. 한·중 IIT 지수 | 95 |
| 표 4-5.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중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 97 |
| 표 4-6.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한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 98 |
| 표 4-7. EU 시장에서의 15개 산업군 한·중 수출경합도 추이(2013~17년) ... | 102 |
| 표 4-8. EU의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 103 |
| 표 4-9. EU의 대중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 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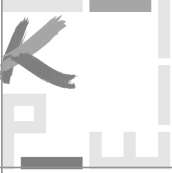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중·EU 관계 발전 추이 | 20 |
| 그림 2-2. 중국 및 EU의 교역상대국(상위 5개 국가) | 23 |
| 그림 2-3. EU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 24 |
| 그림 2-4. EU의 대세계 수출입 규모 | 24 |
| 그림 2-5. EU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7년) | 25 |
| 그림 2-6.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 26 |
| 그림 2-7.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변화 추이 | 28 |
| 그림 2-8.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 30 |
| 그림 2-9.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변화 추이 | 32 |
| 그림 2-10.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및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중국의 비중 | 34 |
| 그림 2-11.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형태 | 36 |
| 그림 2-12.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산업별) | 36 |
| 그림 2-13.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및 EU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 | 37 |
| 그림 2-14.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형태 | 38 |
| 그림 2-15. EU의 대중국 직접투자(산업별) | 38 |
| 그림 3-1. EU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 44 |
| 그림 3-2. EU의 국가별 상계관세 조치 | 44 |
| 그림 3-3. EU의 대중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7. 12. 31 기준) · | 47 |
| 그림 3-4.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 56 |
| 그림 4-1.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중국 상품 점유율 추이 | 99 |
| 그림 4-2.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한국 상품 점유율 추이 | 99 |



글상자 차례

| | |
|-----------------------------------|----|
| 글상자 3-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 61 |
| 글상자 3-2. WTO 분쟁해결절차 | 70 |

제1장 | 서론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중·EU 경제협력’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¹⁾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로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최근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화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중·EU 통상관계에 대한 분석은 특히 국내에서 많이 부족하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

1) 중국은 중동부유럽(CEE)의 11개 EU 회원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과 5개 서발칸의 비EU 국가(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와 2012년부터 16+1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중국이 EU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EU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혹은 상호 간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EU의 통상현안 분석은 향후 우리의 대 EU 통상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점검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 | |
|----------------------------------|---|--|---|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주요 선행연구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 연구자: 윤여준 외(2017) - 연구 목적: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對중국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실증분석 - 현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출범할 미국의 신정부 정책을 대중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2016 미국대선과 미국의 외교·경제통상정책 성향 분석 및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 윤여준 외(2016) - 연구 목적: 미 대선과 관련 향후 미국의 외교·통상정책의 방향성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실증분석 - 현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후보별, 정당별 외교·통상 정책 입장을 분석하여 향후 미국의 관련 정책 방향성 도출 - 한·미 동맹, 대북정책, TPP, 한·미 FTA 등 세부 이슈별 정책 방향성 도출 |
|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의 영향 - 연구자: 양평석 외(2016) - 연구 목적: 미·중 경제협력 현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과 추진 가능성,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정성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중·미 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미 통상마찰이 한·중 경제협력과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미 마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대응책 강구가 긴요 |
|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 연구자: European Commission(2017b) - 연구 목적: EU 개정 반덤핑 규정 6a(c)에 의거, 중국경제의 심각한 왜곡 여부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정성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가 개정 반덤핑 규정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첫 번째 국별 보고서에 해당 - 중국경제 3개 부문(전반적 왜곡, 생산요소 왜곡, 특정 분야 왜곡)에 대한 심각한 왜곡 여부 판별 |

표 1-1. 계속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Tomorrow's Silk Road: Assessing an EU-China Free Trade Agreement - 연구자: Pelkmans <i>et al.</i>(2018) - 연구목적: 중·EU 양자간 교역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중·EU FTA 체결 및 발효 시 중·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EU FTA 체결 가능성을 중·EU 양자간 교역 현황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모색 - 중·EU FTA 체결 및 발효 시 중·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본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중·EU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 분석 -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 전망 |

자료: 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중·EU 경제협력’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연구·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하며, 중·EU 통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를 수집, 분석하였다.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 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 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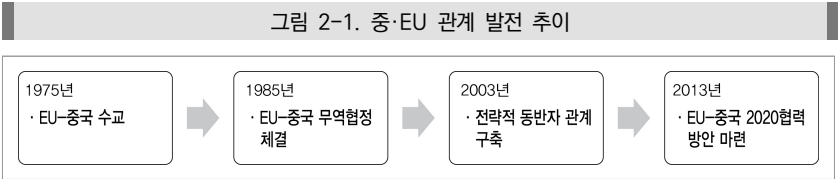
EU와 중국은 각각 2017년 기준 명목 GDP 17조 2,973억 달러와 12조 2,167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 3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²⁾ 거대 경제 규모의 EU와 중국은 양측에게 중요한 교역·투자 상대국으로, EU는 중국의 1위 교역상대국이며 중국은 EU의 2위 교역상대국이다. 투자에 있어서 EU의 대중국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EU 투자는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EU와 중국은 1975년 수교를 시작한 뒤 1998년 이래 거의 매년 중·EU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40여 년간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EU(당시 EC, 유럽공동체)와 중국은 수교 이후 1985년 EU-중국 무역협력협정(EU-Chin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양측간의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정체기를 보였으나³⁾ 200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EU-China Strategic Partnership)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3년 2020년까지의 공동 협력 방안을 담은 ‘EU-중국 2020 협력 전략(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을 채택하였으며 양자 관계는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하였다. 2020 협력 전략은 중국의 발전 전략인 ‘12차 5개년 계획(12th five year plan)’과 EU의 ‘2020 전략(EU

2) IHS Database(검색일: 2018. 7. 28).

3) tni(2017),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in the Age of Brexit and Trump”, p. 9, <http://www.tni.org/en/publication/chinese-investment-in-europe-in-the-age-of-brexit-and-trump>(검색일: 2018. 9. 15).

2020 Strategy)’을 연계하여 마련한 것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문(joint document)으로 평가된다(그림 2-1 참고).⁴⁾ 2016년 EU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 요소(Elements for a new EU strategy on China)를 발표하였으며 시장개방을 통한 중·EU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조기 투자협정 체결 및 인프라, 디지털, 인적교류 등 협력 확대, 그리고 UN, G20의 책임 강조를 제시하였다.⁵⁾



자료: 저자 작성.

중국과 EU의 협력은 매년 개최되는 중·EU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대화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발전하였다. 경제·통상 분야의 대화채널은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EU-China High-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로 2007년 개최된 중·EU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창설되었다. 7차까지 개최된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의 주요 성과로는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등 과잉생산 감축 합의 △중·EU간 연결성 관련 투자 합의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 공동 지원 표명 및 실무그룹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는 2008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된 이래 2018년 6월 25일 제7차 대화까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경제, 통상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중·EU간 연계성 강화 등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표 2-1 참고).

4) European Commission(2018), "Factsheet: EU China relations", p. 1, https://eeas.europa.eu/topics/external-investment-plan/34728/eu-china-relations-factsheet_en(검색일: 2018. 10. 17).

5) European Commission(2016), p. 2.

현재 중·EU간 주요 핵심 이슈는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협상으로 2013년 제 16차 중·EU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8년 7월 18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⁶⁾ 중·EU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상호간 상이한 입장으로 협정 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⁷⁾

| 표 2-1. 중·EU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 1~7차 주요 내용 | |
|-------------------------------------|--|
| 일정 및 장소 | 주요 내용 |
| 1차 (2008. 4. 25 베이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및 투자 기회 발굴, 중국 통관절차 개선에 대한 EU의 기술적 지원 - 경제성장 촉진 및 생활 수준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화 추진 - 친환경 상품 교역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강화 - 중·EU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협력 - 아프리카 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방안 발굴 - 첨단 기술 교역 장려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
| 2차 (2009. 5. 7~8 브뤼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협상 조기 타결 지지 입장 확인 - 양자간 투자 환경 개선, 경쟁정책 및 규제 분야 협력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조건 기준 검토를 위한 공동 연구 합의 - 지적재산권(IPR) 위반 상품 단속 방안 협의 - 양자간 농식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위생·검역 조치(SPS) 이슈 협의 - 저탄소 경제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협의 - 중·EU 중소기업 정책 대화 개최 및 EU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합의 |
| 3차 (2010. 12. 20~21 베이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련 교류·협력 강화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자간 협상 추진 - 첨단 기술 교역 분야 협력 강화 - 양자간 투자협정 타당성 연구 조사 실시 - 공산품, 소비자재, 식품 안전 및 동식물 보건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서 과학 연구 및 기술 협력 - 인재 교류, 혁신 관련 공동협력 강화, R&D 자금 지원 확대 - 반독점 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 - 양측 세관부처 '세관 협력 전략 프레임'과 '세관 지식재산권 행동 계획' 등 논의 -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 균형적인 WTO 도하라운드 협의 추진 |

6) European Commission(2018. 7. 24, 검색일: 2018. 10. 3).
7)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Huang Ping 소장, Chen Xin 교수 인터뷰(2018. 6. 19, 중국 베이징).

표 2-1. 계속

| 일정 및 장소 | 주요 내용 |
|-----------------------------|--|
| 4차 (2013. 10. 24 브뤼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으로서 G20 중요성 강조 - 미래 성장동력 관련 규범·표준·공공조달 분야 논의, 녹색성장 분야 토의 - 중·EU 간 무역·투자 분야 개방 중요성 강조 - 양측 무역 진흥 방안 및 무역마찰 관리방안 논의 - 산업정책의 국제무역 및 투자 영향 토의 - 자동차 관련 규제 협력 필요성 및 국제 기준 수렴 문제 논의 |
| 5차 (2015. 9. 28 베이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EU간 투자 협력 - 중국정부 유럽투자계획에 참여의사 선언 - 양측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협상그룹 구성 합의 - 중·EU간 연계플랫폼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EU는 중국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회원국 가입 검토, 중국-EBRD간 협력 강화 촉구 |
| 6차 (2016. 10. 18 브뤼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조정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거시경제 도전, 세계경제 거버넌스 및 중국과 EU의 지속적인 개혁 - 중국의 철강 산업 분야 과잉생산 감축 합의 - 첨단 산업 분야의 새로운 장벽 및 미래 생산 과잉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잉에 관한 지속적 협력 - 구조적 시장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합의 - 유럽 투자 계획과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 사이의 시너지 효과 분석 합의 - EU의 'Digital Single Market for Europe', 중국의 'Digital China' 전략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개발 증진 방법 모색 |
| 7차 (2018. 6. 25 베이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 무역·투자 관련, 디지털 경제, 기후 및 환경 협력 및 연계성 논의 - 중·EU 포괄적 투자협정 추진을 위해 정상회담에서 시장접근 제안 교환 - WTO 중심 규칙 기반의(Rule-based) 다자간 무역체제 공동 지원 표명, 주요 분야의 규칙 개선 및 개혁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약속 확인 - 지리적 표시에 관한 합의 작업 가속화 -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 과잉생산 해결 및 중국 전략 '제조업 2025'의 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 등에서 과잉생산 막을 것을 촉구 - 육류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해결책 모색 - 순환경제, 배출권거래시스템 등 관련 MOU 체결, 해양파트너십 등의 서명 준비 - 연계성 논의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의견 교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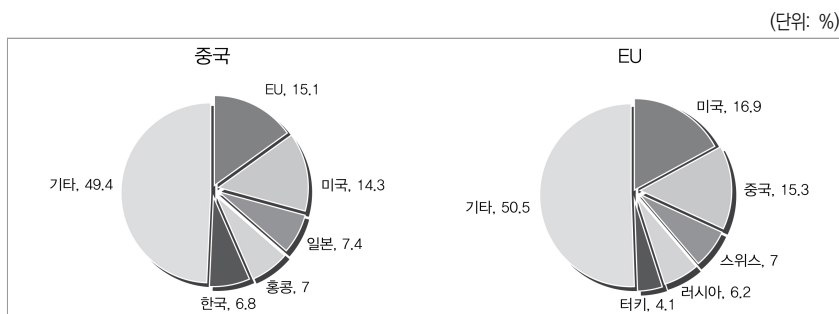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 4. 25); European Commission(2009. 5. 8); European Commission(2010. 12. 21); European Commission(2013. 10. 25); European Commission(2015. 9. 28); European Commission(2016. 10. 18); European Commission(2018. 6. 2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7. 25).

2. 중·EU 무역 현황

가. 무역 추이 및 비중

중·EU간 무역 규모는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양자간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EU의 대중국 총무역액은 6,4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1년의 1,008억 달러에서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무역 팽창에 따라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중국 무역 전체 비중의 15.1%를 차지한다. 중국은 EU의 2대 교역상대국에 해당하며 EU 무역 전체 비중에서 15.3%를 차지한다(그림 2-2 참고). 또한 2000년 기준 EU의 역외지역 수출·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6%, 7.53%이었으나 2017년 기준 각각 10.55%, 20.17%로 높아지면서 중국은 EU의 가장 큰 수입 상대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 되었다.⁸⁾ 이처럼 교역에 있어 중국과 EU는 서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림 2-2. 중국 및 EU의 교역상대국(상위 5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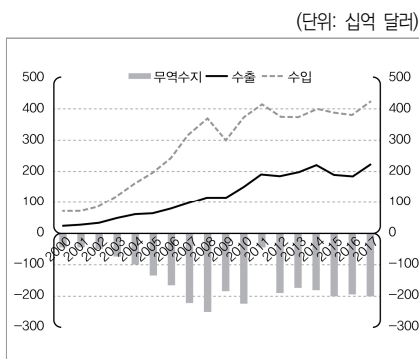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China", pp. 8-9,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366.pdf(검색일: 2018. 8. 20)의 수치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8) Eurostat Database, "EU trade since 1988 by HS2-HS4", <http://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6. 13) 바탕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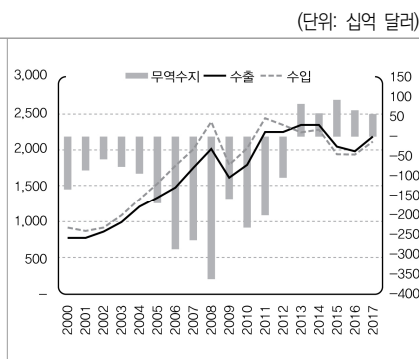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그림 2-3]과 같이 EU는 중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 적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을 기점으로 무역 흑자로 전환된 EU의 대세계 교역과 다른 양상이다(그림 2-4 참고).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대중국 수출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세로 인해 2000~08년 동안 그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 2,517억 달러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EU의 내수 부진 및 수입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적자폭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5~17년에는 연 2,0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 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EU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주: 자료의 한계로 2000년부터 살펴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4).

그림 2-4. EU의 대세계 수출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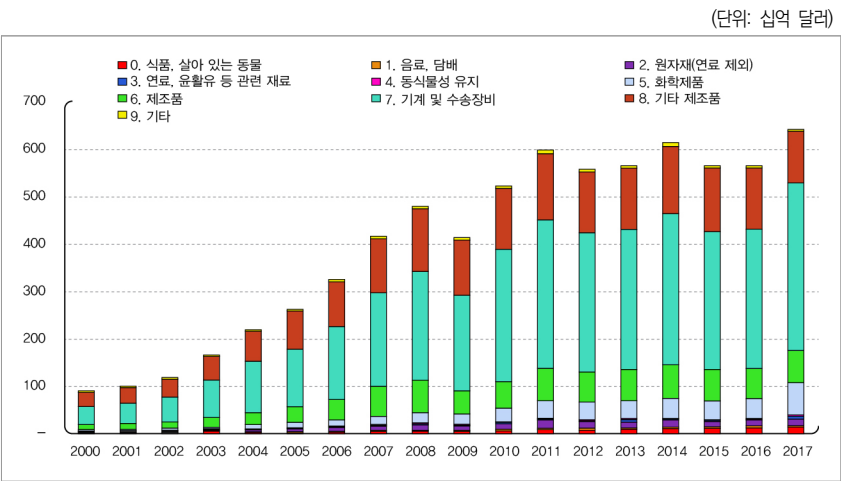
주: 무역수지는 오른쪽 축 기준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4).

나. 품목별 수출·수입 현황

[그림 2-5]에서 보듯이 EU의 대중국 최대 교역 품목은 제조품, 기계·수송장비로 2017년 EU의 대중국 수출액의 71.6%, 수입액의 88.1%를 차지한다. 기계·수송장비 관련 교역액은 2000년 기준 380억 달러에서 2017년 3,5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중·EU간의 총교역액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기계·수송장비 관련 교역이 중·EU 교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에는 화학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 4.8%에 불과하던 비중이 2017년 11%를 기록하였다. 이에 각각 80%, 90%에 육박하던 제조품·기계 수송부문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2-5. EU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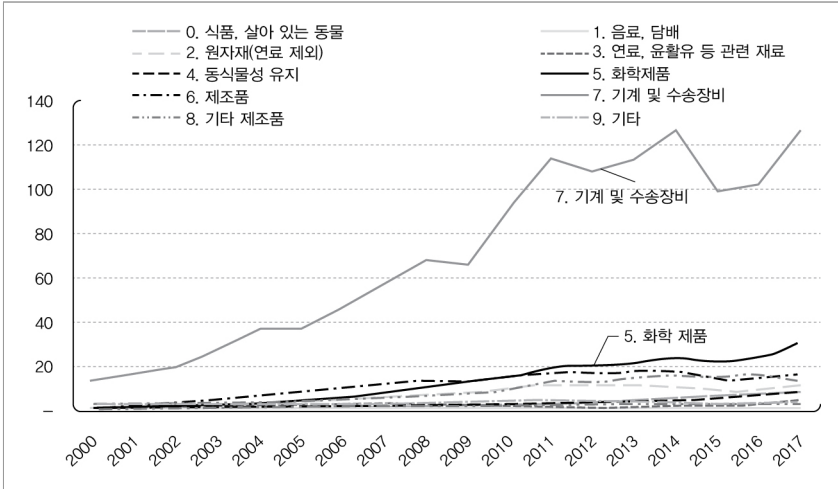


주: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0).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SITC 1단위로 살펴본 [그림 2-6]과 같이 주로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이며 다른 품목과 다르게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기준 EU의 대중국 기계 및 수송장비 수출액은 14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4년 기준 1,2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세 약화로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으나 2017년 수출액 1,2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 화학제품류(SITC 5)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후 성장세가 과거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기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그림 2-6.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단위: 십억 달러)



주: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0).

SITC 2단위를 통해 세부 품목으로 살펴본 [표 2-2]와 같이 EU의 대중국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도로주행차량(SITC 78)과 전기기계 장치·기기(SITC 77)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17.5%, 10.4%를 차지한다. 도로 주행차량의 수출액은 2007년 전체 수출액의 8.47%로 상위 4위 품목이었으나 전체 수출액 증가율(127.3%)을 상회하는 증가 속도(369.5%)로 2010년 이후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⁹⁾ 이밖에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기타 수송장비 등이 상위 수출 품목이다.

9)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2-2. 2017년 기준 EU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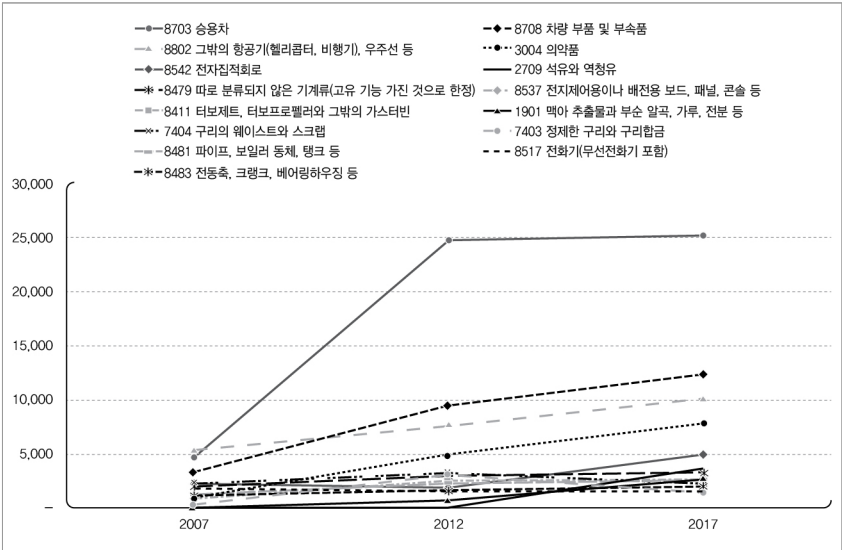
| 순위 | 품목코드 | 품목명 | 수출액 (백만 달러) | 비중 (%) |
|----|------|-------------------|----------------|-----------|
| 1 | 78 | 도로주행차량 | 38,760 | 17.5 |
| 2 | 77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 22,976 | 10.4 |
| 3 | 74 |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 16,908 | 7.6 |
| 4 | 79 | 기타 수송장비 | 12,473 | 5.6 |
| 5 | 72 | 특수산업용 기계 | 12,053 | 5.4 |
| 6 | 87 | 전문, 과학, 통계기구 및 장치 | 11,067 | 5.0 |
| 7 | 54 | 의약품 및 약제제품 | 10,702 | 4.8 |
| 8 | 71 | 원동기기 및 설비 | 8,320 | 3.8 |
| 9 | 33 |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 6,124 | 2.8 |
| 10 | 28 |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 4,928 | 2.2 |

주: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6).

2007~17년의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변화 추이를 HS 4단위 품목으로 살펴보았다(그림 2-7 참고). 승용차(HS 8703)는 2012년에 이어 2017년에도 EU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이다. 특히 승용차는 2007년 수출 1위 품목이었던 그 밖의 항공기(HS 8802)를 제치고 2007~12년 사이 440%의 성장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2-3 참고). 승용차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가 승용차 부품 수출 증가 또한 견인하였다. 이외 의약품(HS 3004)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승용차 및 관련 부품, 그 밖의 항공기에 이어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2-7.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 상위 10대 품목과 2007, 2012년 상위 10대 품목이었으나 2017년 순위 밖 5개의 품목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표 2-3. EU의 대중국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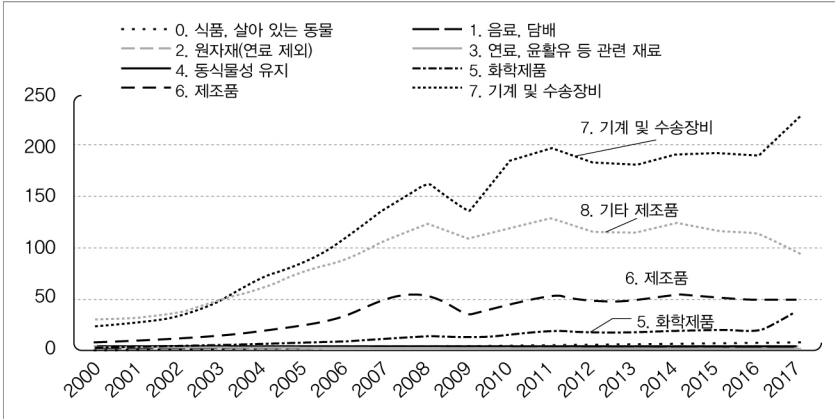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순위 | 구분(HS4) | 2007 | 2012 | 07-12년 변화율 | 2017 | 12-17년 변화율 | 07-17년 변화율 |
|-------------------|--------------------------------------|-------|--------|---------------|--------|---------------|---------------|
| 1 | 8703 승용차 | 4,591 | 24,797 | 440.1 | 25,223 | 1.7 | 449.4 |
| 2 | 8708 차량 부품 및 부속품 | 3,284 | 9,435 | 187.3 | 12,383 | 31.3 | 277.1 |
| 3 | 8802 그밖의 항공기(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 등 | 5,317 | 7,628 | 43.4 | 10,133 | 32.9 | 90.6 |
| 4 | 3004 의약품 | 1,172 | 4,869 | 315.6 | 7,743 | 59.0 | 560.9 |
| 5 | 8542 전자집적회로 | 2,291 | 1,889 | -17.6 | 4,938 | 161.5 | 115.6 |
| 6 | 2709 석유와 역청유 | 0 | 0 | -96.1 | 3,690 | 377651220.5 | 14704987.1 |
| 7 | 8479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교유 기능 가진 것으로 한정) | 1,953 | 3,008 | 54.0 | 3,342 | 11.1 | 71.1 |
| 8 | 8537 전자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등 | 866 | 1,919 | 121.7 | 3,242 | 68.9 | 274.5 |
| 9 |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871 | 2,528 | 190.4 | 2,765 | 9.4 | 217.6 |
| 10 | 1901 맥아 추출물, 부순 알곡, 가루, 전분 등 | 118 | 663 | 461.8 | 2,683 | 304.6 | 2172.7 |
| - | 7404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256 | 3,258 | 44.4 | 2,301 | -29.4 | 2.0 |
| - |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 312 | 3,109 | 896.6 | 1,431 | -54.0 | 358.6 |
| - | 8481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등 | 1,107 | 2,317 | 109.4 | 2,484 | 7.2 | 124.5 |
| - | 8517 전화기(무선전화기 포함) | 1,781 | 1,551 | -13.0 | 1,616 | 4.2 | -9.3 |
| - | 8483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등 | 1,173 | 1,706 | 45.5 | 2,007 | 17.6 | 71.1 |

주: 1~10위 품목은 2017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 이외 '-' 표시 품목은 2007년, 2012년 상위 10대에 들었던 품목이나 2017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이 아닌 것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그림 2-8.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단위: 십억 달러)



주: 1)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2) 이 수치는 EU의 대중국 수입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나, 편의상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으로 서술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0).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과 같이 기계 및 수송장비(54.4%)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외 기타 제조품(22.2%), 제조품(11.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 및 수송장비의 경우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2-8 참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 경제 침체 및 내수 약화로 성장세가 주춤하다가 2017년 기준 2,2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품 및 기타 제조품 수입액의 경우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까지 평균 20%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정체되었다.

SITC 2단위로 살펴본 중국의 대EU 수출에 대한 세부 품목은 [표 2-4]와 같다. 2017년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중 1위는 통신 및 녹음기기로 전체 수입액에서 17.4%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87.8%는 전화기(SITC 764)이다.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10%)을 상회하는 수치이다.¹⁰⁾ 그 뒤를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등이 이었다.

10)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2-4. 2017년 중국의 대EU 수출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품목코드 | 품목명 | 수입액 (백만 달러) | 비중 (%) |
|----|------|------------------------|----------------|-----------|
| 1 | 76 | 통신 및 녹음기기 | 73,373 | 17.4 |
| 2 | 75 |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 53,708 | 12.7 |
| 3 | 77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 48,713 | 11.6 |
| 4 | 89 | 잡제품 | 36,882 | 8.7 |
| 5 | 84 |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 33,197 | 7.9 |
| 6 | 74 |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 19,997 | 4.7 |
| 7 | 69 | 금속제품 | 18,889 | 4.5 |
| 8 | 82 | 가구 및 부분품(침대, 매트리스, 쿠션) | 11,647 | 2.8 |
| 9 | 65 |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 10,722 | 2.5 |
| 10 | 85 | 신발 | 9,768 |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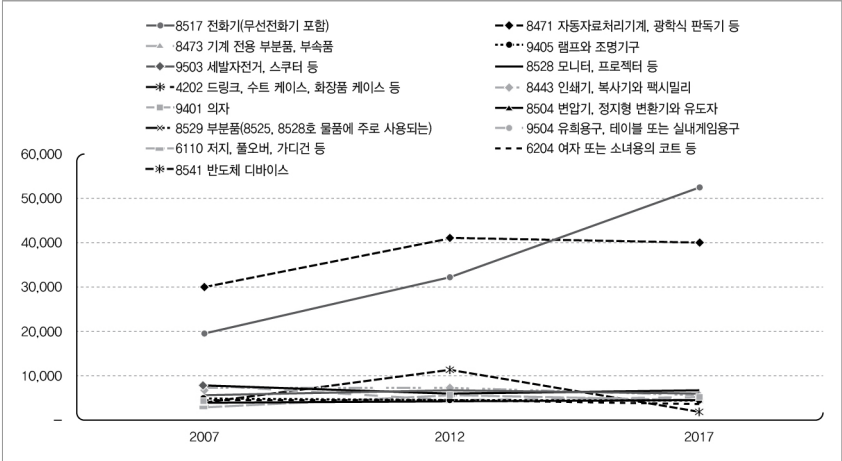
주: 1) 품목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2) 이 수치는 EU의 대중국 수입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나, 편의상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으로 서술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6).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변화 추이를 HS 4단위 품목으로 살펴 보면 [그림 2-9]와 같다. 무선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HS 8517)는 2017년 기준 1위 품목이었던 자동자료처리기계(HS 8471)를 제치고 최대 수출 품목이 되었다. 이 품목은 지난 10여 년간(2007~17년) 166.6% 증가하였다(표 2-5 참고). 의류와 같은 의복제품(HS 6110, 6204)의 경우 2007년, 2012년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되었으나 2017년 기준 10위권 밖으로 물러났다.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전자기기·기계 품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결과 노동집약적 품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숙련 품목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¹¹⁾

11) 英国皇家国际事务研究所,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布鲁盖尔研究所, 香港中文大学刘佐德全球经济及金融研究所(2017), p. 23.

그림 2-9.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17년 상위 10대 품목과 2007, 2012년 상위 10대 품목이었으나 2017년 순위 밖 5개의 품목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임. 2) 이 수치는 EU의 대중국 수입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나, 편의상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으로 서술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3).

표 2-5. 중국의 대EU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 2017년 기준 순위 | 구분(HS4) | 2007 | 2012 | 07-12년 변화율 | 2017 | 12-17년 변화율 | 07-17년 변화율 |
|-------------------|--------------------------------------|--------|--------|---------------|--------|---------------|---------------|
| 1 | 8517 전화기(무선전화기 포함) | 19,638 | 32,399 | 65.0 | 52,363 | 61.6 | 166.64 |
| 2 | 8471 자동차자료처리기계, 광학 식 판독기 등 | 30,025 | 40,944 | 36.4 | 39,953 | -2.4 | 33.06 |
| 3 | 8473 기계 전용 부분품, 부속품 | 7,317 | 6,252 | -14.6 | 7,505 | 20.1 | 2.57 |
| 4 | 9405 램프와 조명기구 | 4,182 | 5,376 | 28.6 | 7,475 | 39.0 | 78.74 |
| 5 |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등 | 6,292 | 6,202 | -1.4 | 7,148 | 15.3 | 13.60 |
| 6 |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등 | 8,030 | 5,726 | -28.7 | 7,131 | 24.5 | -11.20 |
| 7 | 4202 트렁크, 수트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등 | 6,077 | 7,010 | 15.3 | 6,663 | -4.9 | 9.64 |
| 8 | 8443 인쇄기, 복사기와 팩시밀리 | 7,352 | 7,338 | -0.2 | 5,707 | -22.2 | -22.38 |
| 9 | 9401 의자 | 3,962 | 4,621 | 16.6 | 5,583 | 20.8 | 40.93 |
| 10 |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 3,230 | 4,509 | 39.6 | 5,460 | 21.1 | 69.06 |
| - | 8529 부분품(8525,8528호 물 품에 주로 사용되는) | 4,520 | 4,854 | 7.4 | 5,437 | 12.0 | 20.28 |
| - | 9504 유희용구, 테이블·실내게 임용구 | 8,128 | 4,546 | -44.1 | 5,240 | 15.3 | -35.53 |
| - | 6110 저지, 폴오버, 가디건 등 | 2,730 | 5,608 | 105.5 | 4,605 | -17.9 | 68.71 |
| -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코트 등 | 4,836 | 4,830 | -0.1 | 3,524 | -27.0 | -27.14 |
| - | 8541 반도체 디바이스 | 4,054 | 11,237 | 177.2 | 2,463 | -78.1 | -39.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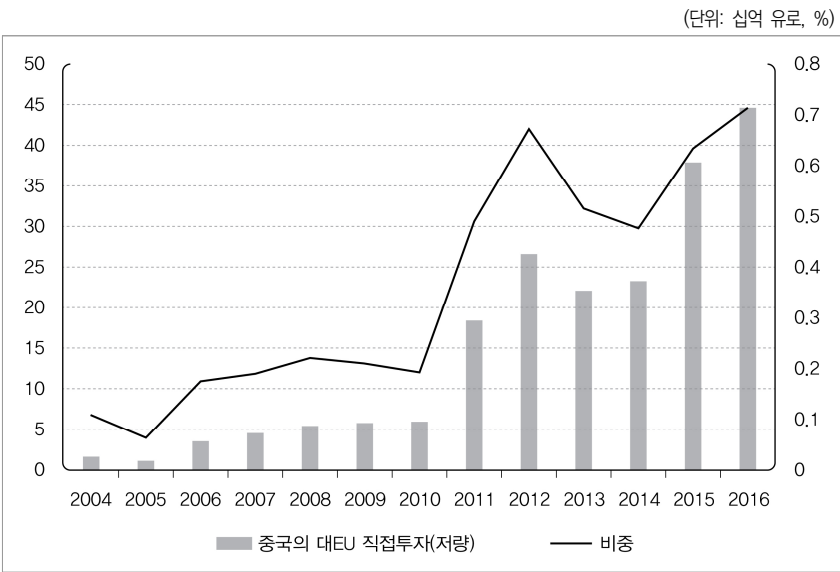
주: 1~10위 품목은 2017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 이외 '-' 표시 품목은 2007년, 2012년 상위 10대에 들었던 품목이나 2017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이 아닌 것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3).

3. 중·EU 투자

가. 중국의 대EU 투자

그림 2-10.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및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중국의 비중



주: 1) 수치는 저량(Stock)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연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중국 수치는 홍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8. 7. 25).

2016년(저량) 기준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6조 2,552억 유로¹²⁾이며 이 중 미국(38.1%), 스위스(12.2%), 버뮤다(10.3%)로부터의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한다.¹³⁾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중국의 비중은 0.7%(2016년)로 중국의 경제 규모 대비 대EU 직접투자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10]과 같이 2016년 기준 중국의 대EU 직접투자금액은 447억 유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12) CEIC Database(검색일: 2018. 7. 25).

13) Eurostat(2017. 12. 21, 검색일: 2018. 12. 17).

표 2-6. 중국의 대EU 해외투자 확대 요인

| 구분 | 세부 내용 |
|------------------|---|
| 기술 | 하이테크 자산, 신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 |
| 유럽 시장 진출 |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 모색 |
| 제3시장 진출 | 유럽법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세계 진출(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
| 브랜드 | 유럽 브랜드를 사용하여 중국 및 해외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시장성 개선 |
| 지역적·세계적 가치사슬의 통합 | 생산, 지식, 수송 과정에서 지역적·세계적 가치사슬을 통합 |
| 안정된 법, 규제, 정치 환경 | 세계적인 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안정된 법적, 정치적 환경 보유 |
| 정치·외교적 영향력 | EU는 미국 다음의 큰 경제 규모로 큰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 확보 |

자료: Seaman, Huotari, and Otero-Iglesias(2017), p. 10.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액은 61억 유로에 그쳤으나 2011년 기준 중국의 대EU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18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서 해외 투자를 강조함¹⁴⁾에 따라 2011년 이후 중국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 요인으로서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 모색, 유럽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브랜드·전문성·기술 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표 2-6 참고).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는 소비주도성장과 기술과 서비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EU 투자 형태는 M&A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룬다(그림 2-11 참고). 로디엄그룹(Rodium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 투자 상황에 따라 투자액은 유동적이나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M&A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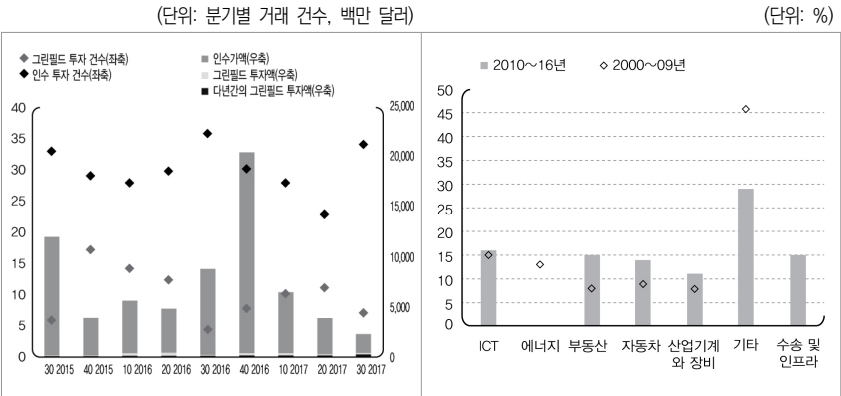
14) 지만수 외(2010), pp. 5~6.

15) European Chamber(2013), p. 1.

하다. 2017년 3/4분기 중국의 대EU M&A 건수는 34건으로 높은 편이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¹⁶⁾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EU 투자 산업은 [그림 2-12]와 같이 ICT, 부동산, 자동차, 수송인프라 등의 분야이다. 투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분기 기준 주요 M&A 분야는 자동차, 병원, 화학산업, 호텔, 공항 등이다. 주요 그린필드 투자 분야는 유럽 주요 도시 내 혁신 및 디자인 센터, 연구개발(R&D) 센터 설립과 원전 건설 등이다.¹⁷⁾

그림 2-11.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형태

그림 2-12.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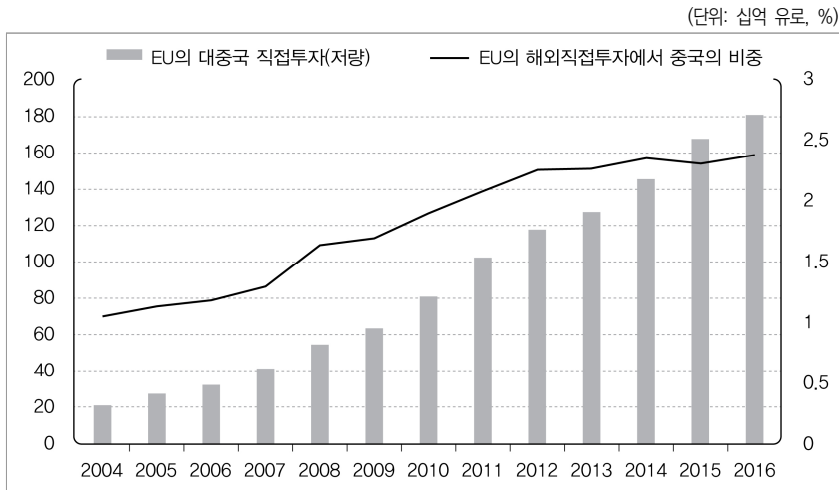
자료: Rhodium Group(2017), p. 6.

주: 1) 2000~09년 누적투자액(60억 유로), 2010~16년 누적투자액(950억 유로) 기준으로 작성.
 2) 에너지는 2010~16년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수송 및 인프라의 경우 2000~09년 자료가 누락됨.
 자료: Hanemann and Huotari(2017), pp. 27-28.

16)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직접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라인을 만드는 투자 형태.
 17) Rhodium Group(2017), p. 6.

나. EU의 대중국 투자

그림 2-13.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및 EU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주: 1) 수치는 저량(Stock)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연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중국 수치는 홍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8.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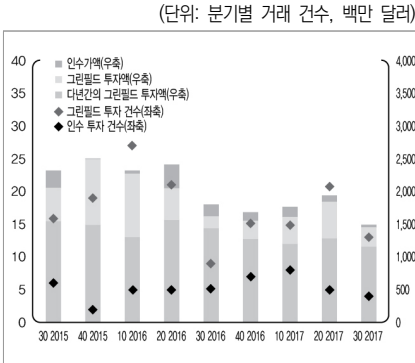
EU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저량) 기준 7조 5,866억 유로¹⁸⁾로 대EU 외국인직접투자 주요국과 유사하게 미국(36.1%), 스위스(12.9%), 브라질(4.9%), 버뮤다(4.9%), 캐나다(3.5%)가 60% 이상을 차지한다.¹⁹⁾ EU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로 나타났다(그림 2-13 참고). EU의 대중국 투자는 2004년 213억 유로에서 2016년 1,811억 유로로 8배 정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EU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의 대EU 투자 형태와 달리 그린필드 위주로 나타난다(그림 2-14 참고). 주요 그린필드 투자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분야의 생산라인과 R&D 센터 및 항공기 최종 조립 공장 건설이 있으며 ICT 분야의 생산기지도 조성 중이다(그림 2-15 참고).²⁰⁾

18) CEIC Database(검색일: 2018. 7. 25).

19) Eurostat(2017. 12. 21, 검색일: 2018.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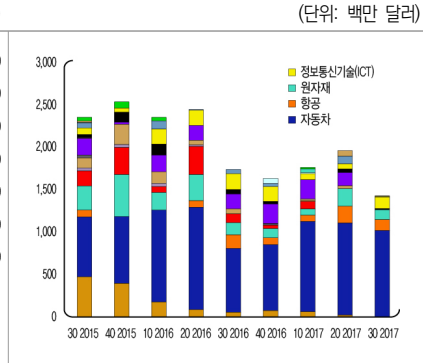
20) Rhodium Group(2017), p. 3.

그림 2-14.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형태



자료: Rhodium Group(2017), p. 3.

그림 2-15. EU의 대중국 직접투자(산업별)



자료: Rhodium Group(2017), p. 4.

4. 기타 협력

중국과 EU는 교역, 투자 외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간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협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추진된 중·EU간 협력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인프라 투자 및 연결성 강화 협력

EU와 중국은 인프라 개선, 아시아-유럽 연결성 강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 협력사례로 EU-중국 연결성 플랫폼(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EU와 중국을 포함한 유라시아(Eurasia) 대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중·EU 고위급 경제무역대화에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는 양측간 철도·항로 등의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여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개최된 제3차 연결성 플랫폼 회의에서 중국과 EU는 ‘연계성 플랫폼 단기행동계획(EU-China Connectivity Platform Short-Term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양측의 철도 관련 인프라 전략인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과 유럽의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TEN-T)’ 전략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EU 철도수송로 공동연구 수행 △철도, 고속도로, 해상수송 등 인프라 관련 기술표준체계 구축 △저탄소 수송인프라 구축 사례 공유 등의 협력 방향을 담고 있다.²¹⁾

2017년 6월 제19차 중·EU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거, 양측은 EU-중국 공동투자기금(EU-China Coinvestment Fund)을 설립하였다. 초기 기금은 5억 유로(약 6,467억 원)로 양측의 인프라 투자 기금인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²²⁾과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²³⁾에서 각출하여 조성되었다. 앞으로 중·EU 및 제3국을 포함하는 TEN-T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정책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유럽 간의 연결성 강화는 양측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⁴⁾

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협력

중국과 EU는 2018년 기준 에너지 소비에서 각각 23.2%, 12.5%의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에서 각각 27.6%, 10.6%의 비중을 차지한다.²⁵⁾ 중국은 전 세계

21) European Commission(2018b), pp. 2-3.

22) 이 기금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일환으로 유럽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23) 중국의 중·장기개발 및 투자 기금으로 주로 지분 투자 형태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간 인프라, 자원·에너지 개발, 금융협력 등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되는 기금임.

24) EU의 세계 교역은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Herrero and Xu(2016), p. 7.

1위, EU는 미국에 뒤이어 3위를 차지하는바,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이며 주요 협력 이슈이다.²⁶⁾ 특히 중국과 EU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 또한 주요 관심사이다. 이에 2016년 EU와 중국은 에너지 협력 로드맵 협정(Energy cooperation roadmap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양자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 투명성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EU는 파리 기후협약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⁷⁾ 물론 세부 방안 조율에 있어서 국가별 행동계획 범위를 감축에 한정하고자 하는 선진국(EU)의 입장과 적응, 재정,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중국)의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²⁸⁾ 협정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 맞서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를 둘러싼 통상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2018년 양측은 중·EU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에 관한 성명서 및 EU 집행위원회와 중국 간 배출권거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양측의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 BP(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8, p. 49, <https://www.bp.com/content/dam/bp/en/corporate/pdf/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18-full-report.pdf>(검색일: 2018. 10. 3).

26) *Ibid.*, p. 8, p. 49.

27)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Ramon Pacheco Pardo 교수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28) 최원기(2018), pp. 12~13.

다. 혁신 분야

혁신은 중국과 EU의 공통된 성장 전략 과제로 양 지역간 주요 협력 의제이다. EU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에서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혁신 친화적 환경 구축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13차 5개년(2016 ~ 2020년) 계획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혁신을 5대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제조업에서의 기술 활용 및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⁹⁾ 중국과 EU의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은 1998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양측은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위해 혁신협력고위급대화채널(ICD: High Level Innovation Cooperation Dialogue) 구축하였다.

2017년 제19회 중·EU 정상회담에서 EU와 중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2018~2020년 동안의 중·EU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공동기금체제(co-funding mechanisms)³⁰⁾를 개편하고 △EU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중국과학원과의 연구협의체계를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다.³¹⁾ 이어 개최된 제3차 중·EU 혁신협력대화에서 농업, 생명공학,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³²⁾ 혁신 분야에서 중·EU는 정책, 제도 및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중심으로 협력하여 양측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간 상이한 표준체계, 규제 등 시장 접근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이 선결 요건이다.

29) EU는 혁신 성장을 위해 ‘Europe 2020 Strategy’에서 2020년까지 R&D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R&D 지출을 2020년까지 GDP 대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0) 중·EU 공동기금체제는 2016~2020년 동안 유럽·중국의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지원을 위해 2015년 양측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음.

31)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Dialogue”, <https://ec.europa.eu/research/iscp/index.cfm?pg=china>(검색일: 2018. 10. 18).

32) *Ibid.*

제3장 |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제3장에서는 중·EU 간 통상분쟁을 이슈별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자간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 WTO 제소와 관련된 분쟁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주요 사례의 전개 과정 및 쟁점, 양자의 입장 및 대응논리 규명에 초점을 두었으며, 각 사례에서 드러난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중·EU 간 통상분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도 제시한다.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가. EU의 대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1) EU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개관

EU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EU는 1947년 GATT 개시 이후 WTO 반덤핑 및 반보조금 협정 체결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에 부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U는 1968년 처음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몇 차례 개정 과정 동안에 생긴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EU 반덤핑 규정(Regulation(EU) 2016/1036,

basic anti-dumping Regulation) 및 반보조금 규정(Regulation(EU) 2016/1037, basic anti-subsidy Regulation)으로 성문화하였다.³³⁾ EU의 무역구제 조치는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담당한다. EC는 상기 두 규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혜택을 입은 수입제품으로부터 EU 역내 산업계의 피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s)를 활용하고 있다.

2) 대중국 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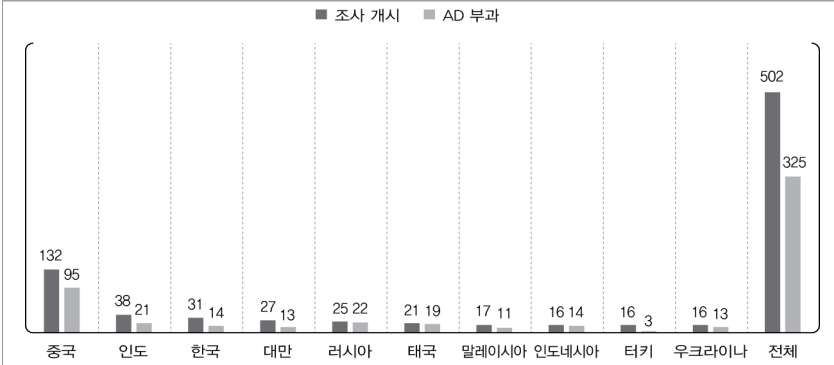
WTO 반덤핑 조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EU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³⁴⁾ 1995~2017년까지 EU는 중국에 대해 총 13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동 기간 EU 전체 반덤핑 조사 502건 중 26.3%에 해당한다. 중국에 이어 인도와 한국이 EU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는데, 그 건수는 각각 38건, 31건에 그치고 있다. 실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건수에서도 중국이 EU의 최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이다. 1995~2017년 EU의 대중 반덤핑관세 부과는 95건으로 전체 325건 중 약 30%를 차지한다. 조사 건수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어 인도(21건), 한국(14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상에서 EU의 반덤핑 조치는 여타 국가에 비해 중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European Commission(2018a), p. 6.

34) WTO, "Sta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 2018. 6. 14).

그림 3-1. EU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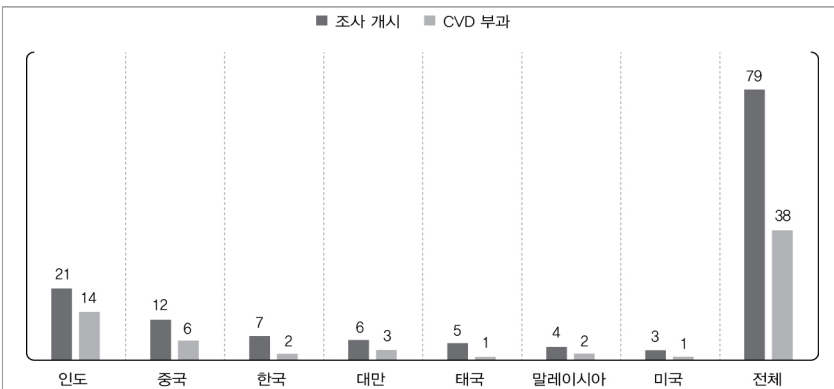


자료: WTO, "Sta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8. 6. 14).

상계관세 조치에서도 중국은 EU의 주요 조치 대상국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EU는 총 79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대중 조사는 12건으로 인도(21건)에 이어 2위의 EU의 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다. 상계관세 부과 건수에서도 중국은 6건으로 인도(14건)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 참고).

그림 3-2. EU의 국가별 상계관세 조치

(단위: 건)



자료: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검색일: 2018. 6. 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은 EU의 최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자 제2위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를 합한 전체 무역구제 조치에서도 약 1/4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바, 중국은 EU의 최대 무역구제 조치 대상국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EU에게 무역구제 조치를 많이 받고 있는 인도의 비중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EU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의 시기적 추이를 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대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 직후인 2002년과 2003년 2년간 EU가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역구제 조사는 7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는 2004년 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2건을 기록하였다. 2011년 이후 EU 전체 무역구제 조사가 20건 이하로 줄어든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발생하였다. 한편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로 떠올랐다. EU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는 2009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0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EU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 중 절반인 3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EU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 조사 및 부과 수준은 반덤핑 조치에 비해 매우 낮다. EU 전체 무역구제 조사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처음으로 3년 연속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1 참고).

표 3-1. EU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단위: 건, %)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전체 | 31 | 33 | 23 | 8 | 29 | 26 | 36 | 9 | 20 | 21 | 18 | 21 | 19 | 9 | 16 | 14 | 15 | 11 |
| 중국 | 6 | 1 | 4 | 3 | 9 | 8 | 12 | 6 | 6 | 7 | 10 | 8 | 7 | 6 | 6 | 6 | 6 | 5 |
| (CVD)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3 | 3 | 1 | 0 | 1 | 2 |
| 비중 (%) | 19 | 3 | 17 | 38 | 31 | 31 | 33 | 66 | 30 | 33 | 56 | 38 | 37 | 67 | 38 | 43 | 40 | 45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a), p. 76; European Commission(2015a), p. 57; European Commission(2013), p. 64; European Commission(2009), p. 68; European Commission(2007a), p. 76; European Commission(2005), p. 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대중 품목별 조치

현재 EU가 시행중인 최종 무역구제 조치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조치 내용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WTO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발효 중인 반덤핑 관세 조치(최종 부과 기준)는 총 117건이며 이 중 중국에 대한 조치 건수가 57건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³⁵⁾ 중국에 이어 러시아, 대만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각각 9건, 6건으로 전체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계관세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상계관세 최종 부과는 16건이며 이 중 중국이 6건으로 인도 5건에 앞선다.³⁶⁾ 품목별 부과 현황을 보면 EU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EU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57건 가운데 철강이 18건으로 최대 부과 대상 품목이며, 화학제품이 1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철강과 화학제품이 전체 부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한다. 철강 및 화학제품을 제외하면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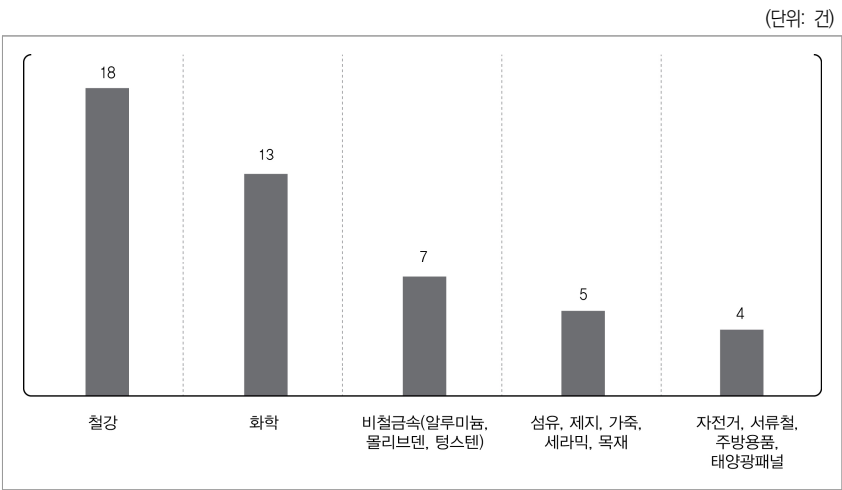
35) WTO(2018a), pp. 11-14.

36) WTO(2018b), p. 4.

늄·몰리브덴·텅스텐과 같은 비철금속이 7건이며, 섬유·제지·가죽·세라믹 4건 이외에 자전거·서류철·주방용품·태양광 패널 등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다.³⁷⁾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기준으로 보면 EU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는 6건으로(전체 16건의 약 38%를 차지) 인도(5건)에 앞서 EU의 최대 상계관세 부과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2건), 제지(1건), 섬유유리(1건), 태양광 패널 및 태양광 유리 각각 1건이다.³⁸⁾

그림 3-3. EU의 대중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7. 12. 31 기준)



자료: WTO(2018a), pp. 11-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WTO(2018a), pp. 11-14.

38) WTO(2018b), p. 4.

나. EU의 대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주요 사례

1) 철강 및 화학제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대중 무역구제 조치 중 절반 이상이 철강과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 철강 및 화학 부문의 과잉생산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핵심 기간 산업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도한 육성과 지원정책이 과잉생산 및 시장왜곡을 창출하였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EU 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제재하고 EU시장과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특히 2006~16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붐으로 인해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⁹⁾⁴⁰⁾ 이러한 과잉생산이 중국산 철강의 수출 팽창 및 세계 철강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철강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한편 EU는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 과정 중 중국정부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시장왜곡 상황을 제기하였다. 중국정부가 화학 산업에 크게 개입하고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시장왜곡 내용과 반덤핑 규제 조치의 주요 현황은 [표 3-2]에 정리하였다.

39) 중국의 생산능력이 증가한 결과 2005년 세계 총 철강 생산능력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2015년에는 약 50%로 늘어났으며, 2014년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규모는 300mmt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EU, 일본, 인도의 생산량을 합한 규모에 해당한다. European Commission(2017b), p. 369.

40) European Commission(2017b), p. 369.

표 3-2. EU의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주요 반덤핑 규제 조치 현황

| 품목 | 반덤핑 관세 부과 | 주요 규제 배경 |
|---|-------------------------------|--|
| 탄산바륨(Barium Carbonate) | 2005. 7. 21/ 2011. 8. 19 | - 조사 대상 2개 수출업체가 실질적인 국가 소유 - 국가가 이사회 대부분의 임원을 지명, 경영에 국 가가 상당 부분 개입함으로써 시장왜곡 발생 |
| 구연산(Citric Acid) | 2008. 12. 3/ 2015. 1. 22 | - 정부가 은행의 특혜 대출(상환기간, 이자 및 담 보) 및 우대 세율 지원 |
| 멜라민(MELAMINE) | 2011. 5. 13/ 2017. 7. 1 | - 주요 생산요소인 천연가스 비용을 정부가 세계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 천연가스 비용을 왜곡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 (Monosodium glutamate) | 2008. 12. 2/ 2015. 1. 22 | - 조사 대상 기업의 결정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간섭으로 결정(정부가 이사회 대부 분을 장악) |
| 옥살산(Oxalic Acid) | 2012. 4. 18 | - 정부가 무이자 특혜 대출 제공 및 면세기간 활용 을 통해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끼침 |
| Peroxodisulphates | 2007. 10. 11/ 2013. 12. 17 | - 정부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지주의 지위 를 활용,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
|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 누르산(Trichloroisocya nuric acid) | 2005. 10. 7/ 2011. 12. 30 | - 정부가 이사회를 장악, 이사회 결정권에 무제한 권한을 행사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pp. 428-429; WTO(2018a), pp. 11-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이 EU는 과잉생산 및 시장왜곡에 따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EC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10건의 신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하였다. 또한 2017년 EU는 중국에 대해 총5건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하였는데, 5건 모두 철강제품이었다.

2)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자전거는 EU가 중국에 대해 2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EC는 유럽자전거제조협회(EBMA)의 제소로 조사를 개시하고 1993년 처음으로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 1997년에는 자전거 부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조치를 내렸다. EC는 중간 재심을 통해 EU 자전거 산업이 수입 자전거 부품에 의존한 조립형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 자전거 수입 지속으로 EU 내 자전거 판매와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자전거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EC는 만일 반덤핑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 내 자전거 생산이 완전히 중국산 자전거 수입으로 대체되고 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접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⁴¹⁾ 이러한 우려 속에 EC는 2005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2013년 6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였다.

3) 세라믹 타일 및 세라믹 주방용품

중국산 세라믹타일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는 2010년 유럽세라믹타일제조연맹(European Ceramic Tiles Manufacturer's Federation)의 제소에 따른 조사 개시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가 취해졌다.⁴²⁾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세라믹산업연합(CCIA)은 2010년 EU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6.5%에 불과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외에도 세라믹 관련 중국기업 및 EU 수입업자들은 세라믹 타일에 대한 EU의 덤핑마진 계산상의 오류를 EU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13년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 중국산 세라믹 주방용품 사례는 세라믹 타일에 비해 보다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세라믹 주방용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41) EPRS(2016), p. 2.

42) European Commission(2012), pp. 30-31.

제소한 EU세라믹제조연합(Ceramie-Unie)은 반덤핑 조치가 없었던 2001~11년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0%에서 70%까지 상승하였으며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수입업자 및 소매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Foreign Trade Association)는 국내 공급가격의 상승을 우려한 탓에 중국산 세라믹 주방용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⁴³⁾

4) 철강 패스너

2009년 최종 결정된 중국산 철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EC가 산업 피해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덤핑 마진 계산방법에 대해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이의를 제기하였다.⁴⁴⁾ 그러나 중국의 주장이 기각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9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이는 중국이 EU를 WTO에 제소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이어서 2010년에는 EU산 철강 패스너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해 승소판정이 내려진 데에 비해 EU의 WTO 제소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철강 패스너에 대한 중국의 WTO 제소는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5) 가죽신발

섬유와 의류에 관한 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에 의해 섬유 쿼터가 종료된 데 힘입어 EU 수입 신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04년 4.4%에서 2005년 1/4분기 8.8%로 두 배나 증가하였다.⁴⁵⁾ 이에

43) EPRS(2016), p. 3.

44) EPRS(2016), p. 4.

45)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 Fibre Arrangement)은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임.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 간 1974년에

EU 신발산업연맹(European Confederation of the Footwear Industry)은 반덤핑 조사 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EC는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하였다. 이러한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EU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되었다.⁴⁶⁾ 즉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소규모 생산업체가 대다수인 국가는 이 같은 조치를 적극 지지한 반면,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영국, 독일, 스웨덴 등)는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반덤핑 관세율은 16.5%로 비교적 낮았으며, 부과 기간도 2년간 발효된 이후 15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⁴⁷⁾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상 문제를 제기하여 EU 일반법원과 WTO에 제소함으로써 양자간 통상분쟁을 야기하였다.⁴⁸⁾ 우선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2006년 EU 일반법원에 EC의 반덤핑 조치를 제소하였다. EC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개별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 차별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EU 법정은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EC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중국은 2009년 EU가 자국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추가로 15개월 연장하자 2010년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WTO 패널은 핵심 쟁점에서 중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가죽신발에 대한 WTO 분쟁은 철강 패스너 사례와 함께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6) 태양광 패널

2012년 EC는 태양광 패널 업체 대표인 EU ProSun의 요청으로 중국산 태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 분야도 GATT 체제로 완전히 편입됨.

46) EPRS(2016), p. 3.

47) European Commission, "Actions against imports into the EU", <http://trade.ec.europa.eu/tdi/completed.cfm>(검색일: 2018. 9. 11).

48) EPRS(2016), p. 3.

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2012. 9) 및 상계관세 조사(2012. 11)를 개시하였으며, 2013년 12월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폴리실리콘 및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로 적극 맞대응함으로써 양자간 통상분쟁은 심화 국면을 맞게 되었다.⁴⁹⁾ 이와 함께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통상분쟁은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을 활용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특징도 동시에 보인다.⁵⁰⁾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규제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통상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은 2013년 8월 ‘가격약속’을 통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가격에 최소가격을 책정하는 데 합의하였다.⁵¹⁾ ‘가격약속’에 합의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후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2015년 12월 재심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3월 태양광 패널 수입의 이해당사자(EU 내 태양광 패널 소비자, 수입업자, 생산자)간 이견을 반영하여 18개월 동안만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는 태양광 시장의 변화(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가격이 세계시장 가격에 근접)와 역내 태양광 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018년 9월 3일자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⁵²⁾ 이에 중국은 상무부 논평을 통해 중·EU간 성공적인 통상갈등 해소의 좋은 본보기라고 평가하며, 향후 양자간 태양광 교역의 정상화는 물론 안정적 통상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⁵³⁾

49) 이에 대한 분쟁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절 ‘라. 중국의 대EU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사례’에서 설명함.

50) ‘가격약속’은 반덤핑 조사 과정 중 수출업체가 조사당국과 수출가격을 조정(인상)하거나 덤핑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를 의미함. 수출업체와 조사당국 간 ‘가격약속’이 성립되면 가격약속에 합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됨.

51) 문익준 외(2013), p. 103.

52) European Commission News archive(2018. 8. 31, 검색일: 2018. 9. 8).

53)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MOFCOM spokesman's comment on EU ending MIPs on Chinese PV products”,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policyreleasing/201809/20180902784346.shtml>(검색일: 2018. 9. 8).

표 3-3. EU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 분쟁 주요 사례

| 품목 | 조사 개시 | 부과 조치 | 관련 분쟁 특징 및 경과 |
|---------------|---|--------------------------------|---|
| 자전거 및 부품 | European Bicy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1993) | 우회덤핑방지규정에 따라 자전거 부품에도 부과(1997) | - 1993년부터 20년 이상 장기 반덤핑 관세 부과(중국산 자전거 수입 급증에 따른 EU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 지속) |
| 세라믹 타일 및 주방용품 | European Ceramic Tiles Manufacturers' Federation (2010) | 반덤핑 관세 부과 (2011) | - 중국 관련 업계와 EU 수입업자의 EU법정 제소 기각 |
| 가족신발 | European Confederation of the Footwear industry (2005) | 반덤핑 관세 부과 (2006) | - EU 회원국간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의견 대립 표출 - EU 반덤핑규정에 대해 중국은 EU 내 법원 및 WTO에 제소(중국 승소 판정) |
| 철강 패스너 | European Industrial Fasteners Institute(2007) | 반덤핑 관세 부과 (2009) | - 중국 WTO에 제소(2009) - 중국 EU산 패스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 EU WTO에 제소 |
| 태양광 패널 | EU ProSun (2012) | 반덤핑 관세 부과 (2013) | - EU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자 및 업체의 갈등 표출 - 중국의 맞대응 조치(tit for tat); EU 폴리실리콘 및 와인에 대한 반덤핑조치 위협) - 2013년 12월부터 2년간 부과, 2015년 재심 실시, 2017년 3월 18개월 연장 |

자료: EPRS(2016), pp.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중국의 대EU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현황 및 사례

1) 현황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구제(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대폭 증가하였다. WTO 가입 이전 2000년, 2001년 무역구제 조치 조사는 모두 반덤핑 조사에 집중되었으며 건수도 각각 11, 14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해인 2002년 그 숫자는 3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EU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EU의 대중 조사에 비해서는 그 빈도 수가 훨씬 낮다. 이는 양자간 통상분쟁의 양상이 주로 EU의 대중 무역구제 조치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EU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2년과 2013년으로 각각 4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때를 제외하면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치 조사 건수는 2~3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0년 중국이 EU산 감자전분(Potato starch)에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단 한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없었다. 이후 2017년까지 중국의 EU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모두 합쳐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치는 반덤핑 조치에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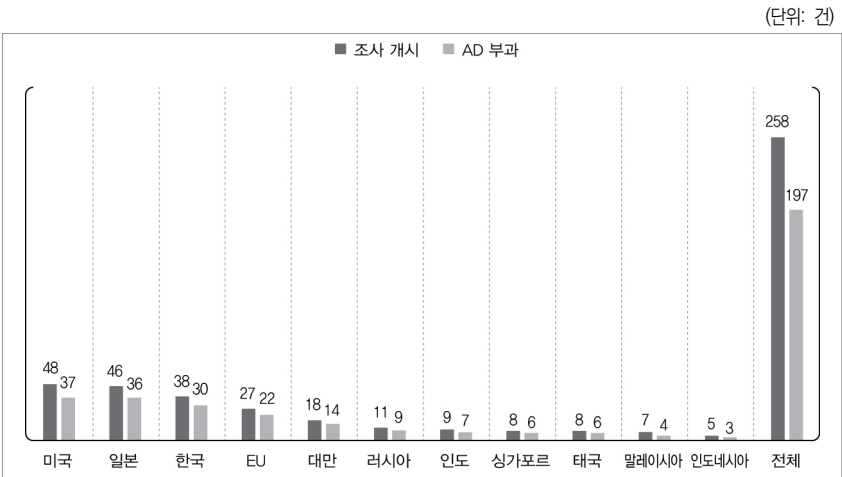
표 3-4.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구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전체 (CVD) | 14 | 30 | 22 | 27 | 24 | 10 | 4 | 14 | 20 (3) | 9 (1) | 5 | 11 (2) | 12 (1) | 7 | 11 | 6 (1) | 25 (1) |
| EU | 2 | 3 | 2 | 3 | 3 | 1 | 0 | 3 | 2 | 4 | 2 | 4 | 4 | 1 | 2 | 0 | 1 |
| (CVD)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1 | 1 | 0 | 0 | 0 | 0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b), p. 20; European Commission(2017a), p. 19; European Commission(2011), p. 32; European Commission(2003), p. 40; European Commission(2007b), p.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현황을 보면 중국의 대EU 반덤핑 조치의 정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WTO의 반덤핑 조치 통계에 따르면 1995~2017년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타났다.⁵⁴⁾ 미국과 일본이 동 기간 중국으로부터 받은 반덤핑 조사 건수는 각각 48, 46건으로 이는 전체(258건)의 18.6%, 17.8%에 해당한다. 이어서 세 번째가 38건의 한국이며, EU는 27건으로 4위를 기록하였다. 조사 건수가 아닌 반덤핑 부과 건수로 살펴봐도 이 같은 순위가 유지되는바, EU는 중국의 네 번째 반덤핑 관세 조치 부과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최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이 중국이며 그 비중 역시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EU 반덤핑 규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림 3-4.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8. 6. 14).

54)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8. 6. 14).

WTO의 반덤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이 EU에 대해 시행 중인 반덤핑 관세 조치(최종 부과 기준)는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화학제품이 최대 조치 대상 품목으로 전체의 절반인 8건의 조치를 받고 있다. 화학 다음으로 철강이 3건, 제지 2건 순이다.⁵⁵⁾ 한편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EU 상계관세 조치는 2건으로 감자전분 1건, 폴리실리콘 1건이며 전체 5건 중 3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다.⁵⁶⁾

2) 주요 사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대중 조치에 비해 그 빈도 수는 낮지만 중국도 EU에 대해 비교적 활발하게 무역구제 조치를 취했다. 특히 EU의 대중국산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대응으로 중국 역시 EU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는 이 같은 조치의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가) 감자전분(Potato starch)

중국은 2010년 EU산 감자전분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2011년 9월 최종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⁵⁷⁾ 이는 중국이 EU에 취한 첫 번째 상계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자전분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반덤핑에 국한되었던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치 활용 수단을 보다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의지가 담긴 사례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가 2010년 4월과 5월 사이 중국산 코팅지와 무선 광역통신망 모뎀에 연이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중국이 EU산 감자전분에 동일한 방식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55) WTO(2018c), pp. 8-11.

56) WTO(2018d), p. 7.

57) European Commission, "Actions against exports from the EU", <http://trade.ec.europa.eu/actions-against-eu-exporters/cases/index.cfm>(검색일: 2018. 9. 12).

대응한 것이다.⁵⁸⁾ EU 감자전분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 이전에 이미 중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즉 중국은 EU산 감자전분에 대해 2006년 2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2007년 2월 최종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처럼 이미 반덤핑 관세 조치가 내려진 동일 제품에 재차 상계관세 조치를 중복하여 취한 것은 그만큼 중국의 맞대응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 폴리실리콘 및 와인

중국이 EU산 폴리실리콘과 와인에 취한 무역구제 조치는 EU의 대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규제(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보복 맞대응 조치로, 양자간 통상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EU 수입제품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발동했다는 특징을 보인 사례이기도 하다.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일, 와인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 동시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한편 양자간 폴리실리콘 및 와인에 대한 통상갈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측이 분쟁 해소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과 같이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 상황이 일어났다. 중국은 2014년 1월 24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가격인상 약속’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EU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 수출업체와 중국정부 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2014년 3월 14일 ‘가격약속’ 협정이 체결되었다.⁵⁹⁾

와인을 둘러싼 중·EU 분쟁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복조치가 명백하다는 양측 언론의 지나친 보도가 확산되면서 양측간 분쟁 해소를 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양측 관련 업계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협의를

58) 박월라 외(2011), p. 187.

59) European Commission(2014), p. 4.

지속하고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측 와인협회 사이에 대화채널을 통해 2013년 11월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3월 중국 와인업계의 조사 철회 요청에 따라 중국정부가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종료하였다.⁶⁰⁾

다) 철강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

철강 패스너와 방향성 전기강판은 중·EU간 철강제품 분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에 해당하는바, 서로 같은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를 주고 받았다. 즉 중국이 2008년 12월 EU산 철강 패스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직후 EU는 2009년 1월 중국산 철강 패스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최종 부과를 결정하였다. 특히 EC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상 정보 공개 문제와 부당한 피해사실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⁶¹⁾

중국은 2016년 7월 EU산 철강제품인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하였는데, 이 역시 이전에 EU가 중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표 3-5. 중·EU간 강철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 분쟁 경과 | | |
|--------------------------------------|--|--|
| | EU의 대중 반덤핑 조치 | 중국의 대EU 반덤핑 조치 |
| 강철 패스너 | - 조사개시: 2007.11.9 - 최종판정: 2009.1.31 | - 조사개시: 2008.12.29. - 최종판정: 2016.2.29 |
| 방향성 전기강판 | - 조사개시: 2014.8.14. - 최종판정: 2015.10.30 | - 조사개시: 2015.7.23. - 최종판정: 2016.7.23 |

자료: European Commission, "Actions against imports into the EU", <http://trade.ec.europa.eu/tdi/completed.cfm>(검색일: 2018. 9. 11); European Commission, "Actions against exports from the EU", <http://trade.ec.europa.eu/actions-against-eu-exporters/cases/index.cfm>(검색일: 2018. 9. 12).

60) European Commission(2014), p. 4.
61) European Commission(2010), p. 12.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가. 논의의 배경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반덤핑 조사 절차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았다. 즉 WTO 가입의정서 15조 (a)(ii)에 따라 조사 대상 중국 생산자(기업)가 제조, 생산 및 판매 과정상 시장경제 조건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이 중국 국내가격 대신 다른 기준(제3국 가격 및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d)항에 따르면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a)(ii)가 효력을 만료한다고 규정하였다.⁶²⁾ 이에 따라 이 조항이 만료되는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 및 EU 등의 주요국과 중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조항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마진(수출기업의 국내가격(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지는데, 비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 대신 제3국 대체가격이나 다른 가격기준을 활용한다. 이 경우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을 때에 비해 덤핑마진이 높게 산정되어 보다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대 반덤핑 부과 대상국인 중국은 조기에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여, 고율의 반덤핑 조치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⁶³⁾ 반면 반덤핑 조치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제하려는 수입국 입장(EU 및 미국)에서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고율의 반덤핑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62) WTO(2001), p. 9.

63)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수입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 중국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의 대체가격을 정상가격(덤핑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게 됨. 이 경우 대체적으로 중국 국내 생산비용이 낮아 중국 국내가격보다 제3국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덤핑마진이 더 높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큼.

중국의 가입 의정서 제 15조.

제15조. 보조금과 덤핑 결정 시 가격 비교

1994 GATT 제6조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은 다음과 같이 중국산 물품의 WTO 회원국 수입 절차에 적용된다.

- (a) 1994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에 의해 가격 비교 가능성을 결정할 때, WTO 회원국인 수입국은 조사 대상 산업의 중국 내 판매가격이나 국내비용을 사용하거나, 다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이나 비용의 엄격한 비교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i) 만약 조사 대상 생산업체가 해당 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에 시장경제 상황이 존재함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 반덤핑 조사 절차상 가격 비교를 위하여 조사 대상 산업의 중국 내 가격 또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 (ii)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 조사 대상 생산업체가 해당 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에 시장경제 상황이 존재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국 내 판매 가격이나 비용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중략)

- (d) WTO 회원국인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이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게 된 때 (a) 조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수입국 국내법의 시장경제국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a)(ii)항은 중국의 WTO 가입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종료된다. 또한 수입국인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이 특정 산업 또는 부문에 시장경제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경우 (a)항의 비시장경제 관련 조항은 해당 산업 또는 부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료: WTO(2001), pp. 8-9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엇갈리면서 EU와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a)(ii) 및 (d)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아래 [표 3-6]에 이들의 해석과 주장을 정리하였다.

표 3-6.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대한 EU와 중국의 입장

| | EU | 중국 |
|-------------------|--|--|
|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해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15년 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종료 되는 것은 (a)(ii)일 뿐이며, 다른 조항을 근거로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유지됨. - 반덤핑 조사 절차상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a)(i)항은 존속(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음). - 제15조 (d)항에서 수입국 국내 법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 상황을 입증해야 하므로 MES 부여 여부는 각 수입국이 결정할 사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조 (d)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12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이 지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 - 제15조 (a)(ii)항이 만료되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제15조 (a)항 전체가 만료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주장 |
| 반응 및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결의안 채택 (2016. 5) - 반덤핑 규정 수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대체가격 적용은 중국기업에 매우 불공정한 규정이며, 보호무역정책이라고 주장 - 15조 (d) 조항을 제한한 미국과 유럽이 (d)항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규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 |

자료: 정혜선(2016), p. 4;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7), pp. 10~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EU의 반덤핑 규정 개정

EU 집행위는 2017년 12월 20일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및 반보조금)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Regulation (EU) 2017/2321)을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반덤핑 조사 대상국(수출국)의 시장경제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 경제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경우, 수출국 국내가격 대신 비슷한 경제개발 수준의 대체

국가 생산 및 판매비용을 반영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벤치마크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⁶⁴⁾ EU가 새로운 반덤핑 절차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즉 역외국(특히 중국) 저가 상품의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EU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지위 논란에서 벗어나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출국 국내가격 대신 대체국 또는 벤치마크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국가(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EU는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⁶⁵⁾ 첫째, 심각한 왜곡은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가격 및 비용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결정되지 않고 정부의 중대한 개입에 의해 결정된 상황을 의미한다. 둘째, 심각한 왜곡의 기준으로 △ 국가의 소유·통제·지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의 비중(국유 기업의 시장 지배) △ 가격 비용에 대한 정부 개입 △ 국내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외국기업 차별) △ 공공정책 목적의 자금 지원(금융왜곡) 등을 규정하였다.

다.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 및 중국의 반응

1)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 배경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12월 20일 새로운 반덤핑 규정 발효와 함께 중국경제의 심각한 왜곡에 관한 보고서(이하 중국

64) 개정 전 EU는 수출국의 시장경제지위 여부에 따라 덤핑마진 산정 시 차이를 두었음. 즉 시장경제국인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 반면, 비시장경제국인 경우에는 대체시장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활용함. 강민지(2018), p. 22.

65) European Commission(2017. 12. 20),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8. 9. 7).

경제 왜곡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로 이 보고서의 목적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반덤핑)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특정 국가의 경제왜곡 보고서 발표는 새 규정 6a(c)항에 따른 것이다.⁶⁶⁾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특정 국가나 산업의 왜곡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의 하나로서 반덤핑 조사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바, EU 업계는 이 보고서에 드러난 정보를 반덤핑 조사 제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⁶⁷⁾ EU가 첫 번째 왜곡보고서의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중국이 EU의 최대 무역구제 조치 대상국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EU 측의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경제 왜곡보고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세부 사항에 대한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첫째, 전반적 왜곡(Cross-Cutting Distortions) 부분에서는 중국경제의 현재 상태와 구조의 핵심적 특징을 파악한다. 여기서는 헌법 및 기타 법률상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 경제 관련 중국 공산당(CCP)의 역할, CCP 지도하 다양한 차원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시스템, 국유기업(SOE) 및 국유부문, 금융시장, 정부조달시장 및 투자심사 시스템을 중점 검토하였다. 둘째, 생산요소 왜곡(Distortions in the Production Factors)

66) 6a(c)항은 특정 국가 또는 분야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충분한 표시(징후)가 있거나, 새 규칙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EC로 하여금 해당 국가 및 분야에 대한 왜곡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

67) European Commission(2017. 12. 20),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8. 9. 7).

은 토지, 에너지, 자본, 노동, 원자재와 같은 다양한 생산요소와 관련된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 왜곡(Distortions in Selected Sectors)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 및 세라믹 등 EU로부터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주요 산업의 왜곡 여부를 진단하였다. 중국경제 왜곡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표 3-7]에 정리하였다.

| 표 3-7.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
|--------------------------------------|---|
| 분석 대상 | 보고서 주요 내용 |
| 1. 전반적 왜곡(Cross-Cutting Distortions) | |
| 1) 사회주의 시장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경제시스템은 국가, 중국공산당의 경제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부여, 당의 지도적 역할과 통제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서 공식적 지정으로부터 나옴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특징은 지배적인 국가 소유, 광범위하고 세밀한 경제계획 시스템, 경제에 관한 정부정책의 간섭(지도목록, 투자 심사, 금융 인센티브) - 이들은 비시장 자원배분과 과잉설비를 야기 |
| 2) 중국공산당(CC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산당은 유일한 집권당으로 당의 지도적 역할은 헌법이 부여, 당의 지도적 역할은 행정, 국방은 물론 경제와 사법제도 등 전 국가적 범위를 포괄 - 당이 국가경제 의제를 수립하고 모든 이행사항을 통제, 이러한 권한은 거시 경제 통제를 넘어 각 개별 국유 및 민간기업의 경영 결정에까지 확대. - 즉 이는 기업 경영이 국가와 당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 |
| 3) 계획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시스템은 단순한 전략 개념을 뛰어 넘는 것으로, 계획은 중국경제의 방향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모든 정부의 목표를 설정 - 계획에 의해 설정된 목표는 구속력이 있으며, 상위 당국은 정기적으로 그 이행 상황을 통제하고 감시함. - 중국 지도부는 전략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획 시스템에 의존, 계획 시스템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 4) 국유기업(SO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E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전체 생산의 30%, 산업자산의 40%, 은행대출의 약 50%, 금융·통신·교통·철강·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서 우월한 지배력 - 전반적으로 제도적 법적 환경이 국유기업에 유리(금융 접근 우대, 시장접근 보호, 토지 사용권 우대): 이는 효과적 자원 배분을 왜곡 |

표 3-7. 계속

| 분석 대상 | 보고서 주요 내용 |
|--|---|
| 5) 금융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국유은행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 영향력이 광범위 - 중국은행들은 국유기업 발행 회사채의 최대 보유자이며, 대형 국유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당 조직에 의해 임명되고, 이사회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부분을 차지 - 채권 및 신용등급 관련 위험평가가 정부에 의해 왜곡 - 부적절한 파산법 실행; 파산 절차에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부실기업이나 파산 절차 대상 기업들이 살아남게 됨. 이는 사실상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및 혜택으로 해석되고 금융기관들의 국유기업 우대 대출 유인으로 작용 - 전반적으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정부 개입, 효율적·투명한 시장원리 부재 등의 요인으로 심각한 왜곡이 발생 |
| 6) 공공조달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항상 개방적·경쟁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지 않음. - 'Buy Chinese' 규정에 의해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고, 경쟁제한의 결과 왜곡이 발생 - 정부조달이 정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시장원리를 약화시킴 - 국내기업 정의의 모호성, 효과적 구제시스템의 결여, 중복 규정 및 불투명성으로 인해 외국인의 공공조달 계약 입찰 참여 방해 - 중국 정부조달 규모를 감안할 때(GDP의 20%) 시장경쟁 원리의 부재는 심각한 왜곡효과를 초래 |
| 7)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여전히 산업정책, 법률 및 규제, 승인절차를 통해 민영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 - 정부정책 수요(특정 분야의 통제권 유지, 국유기업 보호 및 국내 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조정 등)에 따라 투자 심사 제도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 - 정부가 국내외 투자 부문 개혁(법체제 단일화, 외국인투자법 수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 역할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향도 나타남. |
| 2. 생산요소 왜곡(Distortions in the Production Factors) | |
| 8)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토지 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배분은 국가에 있으며, 자유 시장원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 - 토지 공급 및 획득에 관한 규정이 불투명, 가격도 비시장적 고려를 근거로 결정,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 지역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발생 |
| 9)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전력 생산국으로, 전력 설비의 약 50%와 전체 송전 그리드의 100%를 국유화(21개 중앙 국유기업이 주도) - 가격은 산업별로 차별화, 특정 분야(비철 금속)의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한 특혜가 있음 - 생산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개입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은 정상적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지 않음 |

표 3-7. 계속

| 분석 대상 | 보고서 주요 내용 |
|---|--|
| 10) 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본 접근이 다양하게 왜곡됨: SOE 및 친정부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 인위적으로 낮은 차입 비용(수익과 위험에 비례하지 않음), 명목금리 자유화(2015. 10)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왜곡이 발생(실제로 기준금리 이하의 대출 비중이 45%로 여전히 높음), 전반적으로 신용대출 증가로 자본 배준의 비효율성 악화(부실 대출 급속 증가) - 최근 금융시장의 시장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중국의 기업대출 시스템은 정부의 지속적 개입으로 야기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 |
| 11) 원자재 및 기타 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광범위한 수단을 활용, 원자재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인위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조절, 중앙집권적 가격 통제, 가격 인상 및 인하 조절) - 특정적 세부 대상에 대한 계획 시스템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 - 원자재 수출 제한을 통해 국내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인하 유도(국내생산자 혜택), |
| 12)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조 설립 및 선택의 자유가 없음. 국가와 공산당에 긴밀하게 연결된 노조만이 유일한 합법 (노조 고위직은 국유기업 내 당 간부나 경영진이 장악, 노동자 이해를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권리를 방해), 공식적 국민 차원의 파업권이 없음. - 노동력은 호구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바, 호구 소유자만이 사회보장과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 임금협상은 존재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
| 3. 특정 분야 왜곡((Distortions in Selected Sectors)) | |
| 13) 철강 | 핵심 기간 산업으로 인식하고 중국정부는 거대 철강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이는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창출 |
| 14) 알루미늄 | 과도한 정부 주도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국유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수출 관련 조치, 세제, 원자재 등 모든 분야에 정부 개입)함으로써 글로벌 공급과잉 및 왜곡을 창출 |
| 15) 화학 | 중국정부의 무분별한 지원, 공급 및 생산요소 통제, 해외 인수 개입 등으로 기업 결정은 물론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저해 |
| 16) 세라믹 |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으로 정부의 감독·관리가 철저, 정부 개입과 지원이 장기간 지속(이노베이션 기금, 특혜 대출, 감면, 재정지원, 수출보조 등)됨에 따라 심각한 시장 왜곡을 유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pp. 2-46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7]에서 정리한 대로 중국경제 왜곡보고서는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총 4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포괄하고 있으나 그 핵심 내용은 명확하다. 당과 국가(정부)가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 전체 중국경제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정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당과 정부가 기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요 부문 국유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 토지와 에너지 제공, 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산업에서 과잉생산 및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사실은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 적용의 핵심 기준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경제 왜곡보고서의 발표는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에 의거, 중국의 덤핑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EU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재차 확인해 준다.

3) 중국의 반응 및 대응

EU의 반덤핑 개정안 논의에 대해 중국은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EU 및 미국의 반덤핑 조사 시 덤핑 마진 산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들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상태다(2016. 12. 12). 중국은 가입의정서 15조에 의거, 2016년 12월 11일 이후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결정 시 비시장경제국 기준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 근거를 밝혔다. EU가 반덤핑 개정을 정식 발효하고, 중국에 대한 왜곡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에는 비난 논평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의사를 표명하였다. EU의 새로운 규정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처사인바, 국제무역질서 보호와 중·EU 간 건전한 경제·통상 관계 구축을 위해 WTO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하여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대응 의지도 빼놓지 않고 있다.

표 3-8. EU 반덤핑 개정 및 왜곡보고서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

| 일시 | 주요 내용 |
|---------------------------------|--|
| 중국 외교부 논평 (2016. 11.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가 제시한 경제왜곡은 단순히 기존 비시장경제 관행을 대체하는 개념에 불과 - EU는 국제무역질서 보호, 중·EU 경제·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WTO 가입의정서 15조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함 |
| 중국 상무부 논평 (2017. 12.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왜곡이라는 개념에 대한 WTO 규정이 없음 - EU는 WTO 규정과 상관없이 대체국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기준에 따라 상대국의 왜곡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WTO 반덤핑 규정의 법적 권한을 저해하는 것임 - EU에 대해 WTO 규정 준수를 촉구,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것임 |
|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 (2017. 12.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시장경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나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EU가 시장왜곡이라는 개념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 - EU에게 중·EU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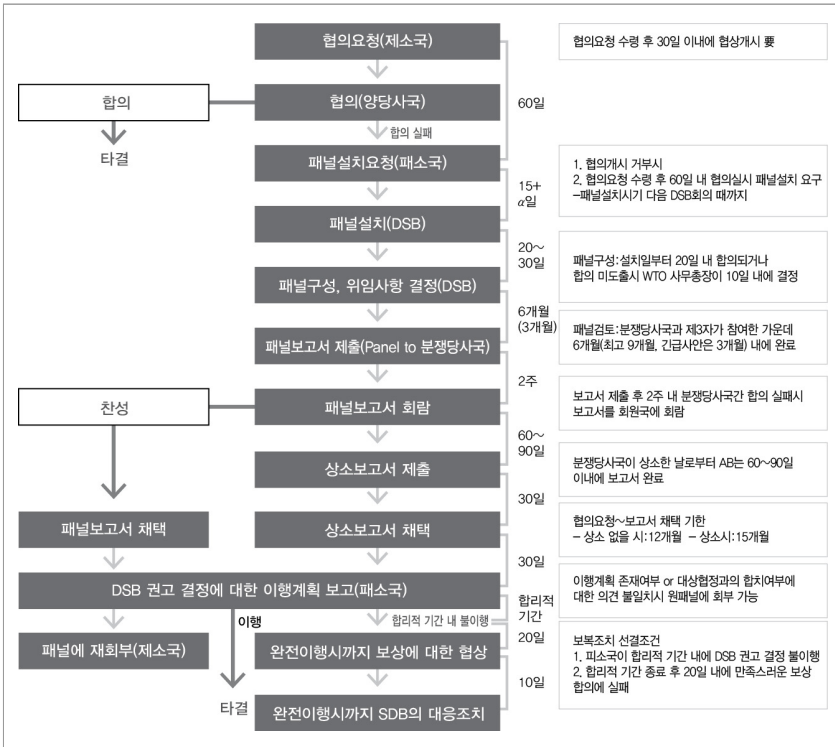
자료: China Daily Asia(2016. 11. 10, 검색일: 2018. 9. 14);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 12. 21, 검색일: 2018. 9. 15);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 12. 22, 검색일: 2018. 9.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중·EU WTO 분쟁

가. 중국과 EU의 WTO 분쟁 현황

중국과 EU의 WTO 분쟁 현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논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먼저 WTO 분쟁해결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WTO 분쟁은 분쟁 당사국 중 일방(제소국)이 상대국에게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는 협의 → 패널절차 → 상소절차 → 이행과정 등 크게 4단계 과정에 걸쳐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글상자 3-2>에 제시하였다.

글상자 3-2. WTO 분쟁해결절차



자료: 외교부, WTO분쟁, http://www.mofa.go.kr/www/wpge/m_3892/contents.do(검색일: 2018. 10. 25).

1) 중국

WTO 가입 이후 중국의 WTO 분쟁(제소 및 피소 당사자 기준)은 2005년 이전 단 2건에 머물렀다.⁶⁸⁾ WTO 가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WTO 분쟁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대중

68) 여기서 WTO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당사국이 제소 및 피소를 당한 사례만을 의미하며, 제3국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WTO 제소가 늘어났으며,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소 건수도 이전에 비해 꾸준히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WTO 분쟁은 총 58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례가 41건으로 제소(1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그동안 주요국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 대중 통상압박을 확대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9. 중국의 WTO 분쟁 추이(2002~18. 6)

|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합계 |
| 제소 | 1 | 0 | 0 | 0 | 0 | 1 | 1 | 3 | 1 | 1 | 3 | 1 | 0 | 1 | 2 | 0 | 2 | 17 |
| 피소 | 0 | 0 | 1 | 0 | 3 | 4 | 5 | 4 | 4 | 2 | 7 | 1 | 1 | 2 | 4 | 1 | 2 | 41 |
| 합계 | 1 | 0 | 1 | 0 | 3 | 5 | 6 | 7 | 5 | 3 | 10 | 2 | 1 | 3 | 6 | 1 | 4 | 58 |

자료: WTO, “Map of disputes between WTO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maps_e.htm(검색일: 2018. 8. 17).

중국의 국가별 WTO 분쟁 현황을 보면, 중국과 WTO 분쟁을 겪은 나라는 총 6개국이며 주로 선진국과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최대 WTO 분쟁 대상국은 34건을 기록한 미국이다. EU는 14건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WTO 분쟁 대상국이며 중국 전체 WTO 분쟁 58건 중 약 1/4를 차지한다. 14건 가운데 중국이 EU를 제소한 사례는 5건이며, 피소(중국이 EU로부터 제소를 당함)는 9건으로 EU의 대중국 제소가 많았다. 미국, EU 다음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이 중국의 WTO 분쟁 대상국이나, 이 국가들과의 분쟁 건수를 모두 합해도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표 3-10. 중국의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단위: 건)

| 국가 | 제소 | 피소 | 합계 |
|------|----|----|----|
| 미국 | 12 | 22 | 34 |
| EU | 5 | 9 | 14 |
| 멕시코 | 0 | 4 | 4 |
| 캐나다 | 0 | 3 | 3 |
| 일본 | 0 | 2 | 2 |
| 과테말라 | 0 | 1 | 1 |
| 합계 | 17 | 41 | 58 |

자료: WTO, "Map of disputes between WTO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maps_e.htm(검색일: 2018. 9. 22).

2) EU

EU는 WTO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였는데, 현재까지 EU와 WTO 분쟁을 경험한 국가는 총 27개국이며 분쟁 건수는 194건에 달한다. 이는 6개 국가와 58건의 분쟁 건수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다. EU의 WTO 분쟁에서 중국은 미국(54건), 인도(17건), 캐나다(15건)에 이어 4번째 대상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EU는 비교적 활발하게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호간에 다른 국가에 비해 적지 않은 수의 분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EU의 주요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 국가 | 제소 | 피소 | 합계 |
|-------|----|----|----|
| 미국 | 34 | 20 | 54 |
| 인도 | 10 | 7 | 17 |
| 캐나다 | 6 | 9 | 15 |
| 중국 | 9 | 5 | 14 |
| 아르헨티나 | 8 | 6 | 14 |

표 3-11. 계속

| 국가 | 제소 | 피소 | 합계 |
|-------|----|----|-----|
| 브라질 | 5 | 7 | 12 |
| 러시아 | 4 | 4 | 8 |
| 일본 | 6 | 1 | 7 |
| 한국 | 4 | 3 | 7 |
| 멕시코 | 3 | 3 | 6 |
| 칠레 | 3 | 2 | 5 |
| 태국 | 1 | 4 | 5 |
| 인도네시아 | 2 | 2 | 4 |
| 호주 | 1 | 2 | 3 |
| 총 건수 | 99 | 95 | 194 |

자료: WTO, "Map of disputes between WTO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maps_e.htm(검색일: 2018. 9. 22~23).

나. 중·EU간 WTO 분쟁의 특징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EU는 현재까지 총 14건의 WTO 분쟁을 겪고 있다. 양측은 서로 상대국이 WTO 관련 협정을 위배했다는 점을 근거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이 14건의 분쟁은 [표3-12]와 [표3-13]에서 각각 EU의 대중국 WTO 제소(9건), 중국의 대EU WTO 제소(5건)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이를 보면 중·EU간 WTO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소의 근거로 인용된 것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임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상품 무역과 관련된 갈등이 최대 분쟁 요인임을 보여준다. GATT를 제외하면 양자간 WTO 분쟁의 최대 원인은 반덤핑 조치에서 발생하였다. 총 14건 중 6건이 상대방의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ADA: Anti-Dumping Agreement)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한 데서 비롯되었다. 6건 중 EU의 대중 반덤핑 조치 제소(DS460, 425, 407)와 중국의 대EU 제소(DS397, 405, 516) 건수가 각각 3건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WTO 분쟁 빈도가 EU에 비

해 월등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제소 의지가 상당히 강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반해 양자간 WTO 보조금 및 상 계관세 협정 위반 여부가 관련된 제소는 2건(DS339, 452)에 그쳤다. 반덤핑 조치에 이어 광물자원 및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WTO 분쟁도 3건(DS509, 432, 395)이나 발생하였다. EU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 제 조치가 GATT는 물론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 로 3차례에 걸쳐 WTO에 제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EU간 WTO 분쟁은 대 부분 상품무역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품목으로 보면 철강, 광물자원 및 원 자재, 신발 및 가금육과 같은 제조업이나 농산물에 집중되었다. 비록 그 빈도는 낮지만 금융서비스 및 지적권 분야에서도 WTO 분쟁이 일어났다. 특히 2018 년 6월 EU가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를 WTO에 제소(DS549) 함으로써 양자간 WTO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 3-12. EU의 대중국 WTO 제소

| 분쟁명 및 분쟁번호 | 분쟁 단계 | 제소일 | 분쟁 대상 조치 및 근거 |
|--|------------|-------------|---|
| Certain Measures on the Transfer Technonlogy(DS549) | | 2018. 6. 1 | - 해외기업의 중국 내 기술 이전 - TRIPS 협정, GATT 및 WTO 가입의정서 위반 |
| Duties and other Measures concerning the Exportation of Certain Raw Materials(DS509) | 패널 구성 | 2016. 7. 19 | 11개 원자재 수출 제한 (GATT 및 가입의정서 위 반) |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DS460) | 상소보고서 채택 | 2013. 6. 13 | EU산 철강제품(고기능성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반덤핑 협정, GATT 위반) |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DS432) | 판정결과 이행 통보 | 2012. 3. 13 |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GATT, 가입의정서 위반) |

표 3-12. 계속

| 분쟁명 및 분쟁번호 | 분쟁 단계 | 제소일 | 분쟁 대상 조치 및 근거 |
|---|------------|-------------|--|
|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X-Ray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from the European Union (DS425) | 판정결과 이행 통보 | 2011. 7. 25 | X레이 검사장비에 대한 반덤핑 조치(반덤핑 협정 및 GATT 위반) |
|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Certain Iron and Steel Fasteners from the European Union(DS407) | | 2010. 5. 7 | EU산 철강패스너에 대한 잠정 반덤핑 조치(반덤핑 협정 및 GATT위반) |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DS395) | 판정결과 이행 통보 | 2009. 6. 23 | 원자재(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아연 등) 수출규제 조치(GATT 및 가입의정서 위반) |
| Measures Affecting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s and Foreign Financial Information Suppliers(DS372) | 양자 합의 | 2008. 3. 3 |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적 조치(GATS, TRIPS 위반) |
| Measures Affecting Imports Automobile Parts(DS339) | 판정결과 이행 통보 | 2006. 3. 30 | 자동차 부품 수입제한 조치(GATT, 보조금 및 상계 관세협정, TRIMS, 가입 의정서 위반) |

자료: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8. 8. 21~24).

표 3-13. 중국의 대EU WTO 제소

| 분쟁명 | 분쟁 단계 | 제소일 | 분쟁 대상 조치 |
|--|---------------|--------------|--|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DS516) | 패널 구성 | 2016. 12. 12 | 비시장지위 국가에 대한 반덤핑 부과 (반덤핑 협정 및 GATT 위반) |
| Measures Affecting Tariff Concessions on Certain Poultry Meat Products(DS492) | 패널 보고서 채택 | 2015. 4. 8 | 가금육 제품 양허관세 수정(GATT 위반) |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DS452) | | 2012. 5. 11 | 재생에너지 지원 조치(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GATT 위반) |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DS397) |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 2009. 7. 31 | 철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반덤핑 협정 위반) |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Footwear from China (DS405) | 판정결과 이행 통보 | 2010. 4. 2 |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반덤핑 협정 및 GATT위반) |

자료: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8. 8. 21~24).

다. 주요 WTO 분쟁 사례

여기서는 주요 개별 사례를 통해 중·EU간 WTO 분쟁의 쟁점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1) 고기능성 무계목강관

이 분쟁은 중국이 2012년 EU산 고기능성 무계목강관(HP-SSST: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다. EU는 2013년 6월 중국이 HP-SSST에 취한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ADA)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DS460). EU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반덤핑 조사 과정 중 생산비용을 결정할 때 실제 데이터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덤핑으로 인한 피해 결정 및 인과관계 조사가 반덤핑 협정(ADA)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정보의 비밀 유지 요건 및 핵심 사실의 공개 의무에 관한 반덤핑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제소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대부분 EU 주장을 지지하며 EU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표 3-14 참고). 이 분쟁은 중국 반덤핑 조치의 WTO 규범 준수 여부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덤핑 결정,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같이 중국 반덤핑 조치 조사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정보 공개와 관련된 투명성 결여도 WTO 분쟁의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3-14.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에 대한 WTO 분쟁(DS460)

| 구분 | 주요 내용 |
|-------------|--|
| 분쟁의 대상 및 근거 | - EU는 자국산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가 반덤핑 협정(ADA) 2.2.2조, 3.1조, 3.2조, 6.5조, 6.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WTO에 제소(2013. 6. 13) |

표 3-14. 계속

| 구분 | 주요 내용 |
|------------------------|--|
|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결과 | <p>- WTO 패널(2015. 2. 14) 및 상소기구(2015. 10. 14), EU의 승소 판정</p> <p>1) 중국이 덤핑 조사 시 관리비, 판매비 및 일반비용을 결정할 때 생산 및 판매 관련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음(ADA 2.2.1 및 2.2.2 위반).</p> <p>2) 중국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인하 효과 발생 여부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함(ADA 3.1 및 3.2 위반).</p> <p>3) 중국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부적절한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으며, 피해 판정 시 덤핑수입과 관련 없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함(ADA 3.1 및 3.5 위반).</p> <p>4) 중국은 조사 신청자들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허용함(ADA 6.5 위반).</p> <p>5) 중국 상무부가 덤핑 결정시 핵심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음(ADA 6.9 위반).</p> |

자료: WTO(2017), p. 190.

2) 희토류 분쟁

이 사건은 EU가 중국의 광물 및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3건의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⁶⁹⁾ 2012년 3월 EU는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3개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수출관세, 수출쿼터, 수출허가 등)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DS432). 이들의 제소 논리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가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인 광물자원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결과,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EU를 비롯한 제소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제가 GATT 협정(11조 및 20조)과 WTO 가입의정서 11.3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69) 이미 EU는 2009년 6월 중국의 원자재(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형석, 아연, 황린)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수출관세, 수출쿼터, 수출허가 및 수출 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패널(2011년 7) 및 상소기구(2012. 1)는 EU 승소 판정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희토류 분쟁에 이어 EU는 2016년 7월에도 중국의 원자재(안티몬, 크롬, 코발트, 구리, 주석, 납 흑연 등 11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음.

이에 대해 주요 광물자원 최대 매장국인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 대응,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수출제한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WTO 분쟁과 관련하여 첫째, 희토류에 대한 수출쿼터 조치는 GATT 20조 (g)항의 ‘고갈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며, 둘째, WTO 가입의정서 11.3조(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수출에 적용되는 모든 조세와 과징금은 폐지한다)는 GATT 20조가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⁷⁰⁾ WTO는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통해 양측간 쟁점에서 대부분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EU 승소 판정을 내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WTO 가입의정서 11.3을 위반하였으며, GATT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판정의 핵심이었다(표 3-15 참고).

| 표 3-15. 희토류 WTO 분쟁(DS432) | |
|---------------------------|---|
| 구분 | 주요 내용 |
| 분쟁의 대상 및 근거 | - EU는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수출규제(수출관세, 수출쿼터, 수출허가 등) 조치가 GATT 협정 및 WTO 가입의정서를 위반한다고 WTO에 제소(2012. 3. 13) |
|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결과 | - WTO 패널(2014. 3. 26) 및 상소기구(2014. 8. 7), EU 승소 판정을 내림 1)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관세 조치는 WTO 가입의정서 11.3조를 위반(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11.3에 규정된 의무조항이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함) 2) 희토류 등에 취한 중국의 수출쿼터 조치는 GATT 11조를 위반하였으며, ‘고갈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g)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림 |

자료: WTO(2017), p. 183.

70) 김종훈(2015), pp. 100~101을 참고하여 정리.

3) 철강 패스너 및 가죽신발

이 분쟁은 EU의 반덤핑 규정 제9(5)조에 의거한 EU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ADA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 반덤핑 규정(384/96)은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덤핑마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다. 즉 비시장경제국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 시 제2(7)조에 따라 시장경제조건(MET)을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가격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제9(5조)는 특정 범위 내에서 개별관세 요건(IT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단일 관세를 부과(즉 반덤핑 관세가 개별 수출업자가 아닌 국가 전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⁷¹⁾ 중국은 이 같은 EU의 반덤핑 규정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철강 패스너 반덤핑 조치에 적용된 EU의 반덤핑 규정 제9(5)조를 WTO에 제소하였다. EU 반덤핑 규정 제9(5)조는 ADA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 제소 근거의 요지였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EU 패소 판정을 내렸다. EU 반덤핑 규정 제9(5조)가 반덤핑 관세 부과시 개별적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ADA 제6.10조, 각 사안별로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ADA 제9.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WTO는 EU가 중국산 철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 중 국내 산업 정의를 ADA 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덤핑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71) 조현숙(2012), p. 106.

표 3-16. 철강 패스너에 대한 WTO 분쟁(DS397)

| 구분 | 주요 내용 |
|------------------------------|--|
| 분쟁의 대상 및 근거 | - 중국은 EU의 반덤핑 규정 제9(5)조와 중국산 철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ADA 일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WTO에 제소(2009. 7. 31) |
|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결과 | - WTO 패널(2010. 12. 3) 및 상소기구(2011. 7. 15), 대부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 며 EU에 대해 패소 판정 1) 덤핑 결정 및 관세 부과 시 EU 규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시장경제국 공급자 (수출 및 생산자)에 대해서만 개별대우를 하고, 국가 전체에(country-wide)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ADA 6.10 및 9.2를 위반한 것임 2) EU는 반덤핑 조사 시 ADA 4.1에 규정한 국내 산업 정의를 따르지 않고, 전체 산업 의 소수 비중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를 국내 산업으로 간주(ADA 4.1 위배) 3) EU는 덤핑 결정 시 가격비교 기준에 사용된 생산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 음(ADA 6.4 및 6.2 위배) |

자료: WTO(2017), p. 165.

이와 같이 EU 반덤핑 규정 제9(5)조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차별적 반덤핑 조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철강 패스너에 이어 중국산 가죽신발 분쟁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중국은 자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EU가 2006년 10월부터 2년간 중국산 가죽신발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09년 12월 관세 부과 조치를 15개월 연장하자,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2010. 2. 1). 이때도 개별 상품 수출업자나 생산자가 아닌 국가 전체에 단일 관세를 부과한 제 9(5)조의 ADA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 분쟁에서도 WTO 패널은 중국에 승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2011. 10. 28). EU가 개별 상품 공급자가 아닌 특정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철강 패스너 사례와 마찬가지로 EU가 중국산 가죽신발 반덤핑 조사 시 개별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덤핑마진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철강 패스너와 가죽신발 분쟁은 EU 반덤핑 규정 제9(5)조의 WTO ADA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분쟁에서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U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분쟁이 반덤핑 규정 개정 관련 논의를 제기하는 계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4.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이상에서 중국의 WTO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EU간 주요 이슈별로 통상분쟁의 전개, 주요 사례별 쟁점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양자간 통상분쟁은 주로 EU의 대중 통상규제와 중국의 대응이라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속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EU가 덤핑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다, WTO 가입 후발 주자, 개도국 지위 등 중국이 처한 여러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7]은 이를 반영하여 주요 이슈별로 EU의 대중 제재 조치와 중국의 반응 및 대응으로 구분하여 통상분쟁을 개괄하였다.

EU와 중국 간 통상분쟁은 주로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2010년 들어 EU의 중국산 코팅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개시에 이어 중국의 대EU 감자전분 상계관세 조사가 이어지면서 상계관세 분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에 비하면 발생 빈도나 강도가 미미하다. 이는 상대국 산업지원 정책을 제재해야 하는 상계관세 조치의 특성상 반덤핑에 비해 양자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대중 반덤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다. 특히 대표적인 중국의 과잉산업인 철강 및 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EU의 대중 수입규제 공세에 대해 중국도 WTO 가입 초기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2000

년 중반 이후 EU에 대해 반덤핑 조치로 적극 맞섰다. 특히 EU의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치를 계기로 EU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실리콘과 와인에 ‘Tit-for-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받아치기)’ 방식의 맞대응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철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 표 3-17. 중·EU 주요 통상분쟁 이슈 | | | |
|-------------------------|--|--|---|
| |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 시장경제지위 문제 | WTO 분쟁 |
| EU의 대중 제재 조치 · 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 - EU 전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1/4이 중국에 집중 (중국은 EU의 최대 무역 구제조치 대상국) - 공급과잉 대표 산업인 철강·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가 집중(전체 품목의 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해석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가 유지된다는 입장(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 반덤핑 규정 개정발효 및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2017. 12)를 통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재 조치 강화 의지 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대중 WTO 제소는 9건(중국은 EU의 4번째 WTO 분쟁 대상국) - 중국의 반덤핑 조치 절차상 문제점,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중점 제소 |
| 중국의 반응 및 대응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중반 이후 EU에 대한 반덤핑 조치 지속 증가 - 상계관세 조치는 미미 - 태양광 패널 분쟁에서 맞대응 조치(tit for tat); EU 폴리실리콘 및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위협 - 강철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에서도 맞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EU의 반덤핑 규정 개정 및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는 WTO 위반이라고 비난 - EU의 반덤핑 조치(덤핑마진 산정 방식)를 WTO에 제소(2016.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EU WTO 제소는 5건(EU는 중국의 두 번째 WTO 분쟁 대상국) - EU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WTO 적법성 여부를 중점 제소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현재 중·EU간 최대 통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U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과 직결된 문제로, 양측의 통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약화로 덤핑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한 역내 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2017

년 12월 새로운 반덤핑 규정 개정을 통해 대중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새 규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반면 EU·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집중적인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다.

WTO 분쟁에서도 양자간 반덤핑 조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에 대한 분쟁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생산비용 계산 방법,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 주로 중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상 문제점에 유의하였다. 또한 이 사례는 반덤핑 조치 결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같이 조사 절차상 투명성 결여 문제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중국은 EU 반덤핑 규정의 WTO 적법성 여부에 주목하였다. 즉 EU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정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바, ADA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강철 패스너 분쟁이다. 또한 이 분쟁에서도 덤핑 결정에 관한 핵심 정보의 공개 여부가 분쟁의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과 EU가 서로에 대한 통상규제 및 제재에만 몰두하지 않고 통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EU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중국은 EU산 폴리실리콘 및 와인에 동일한 방식의 제재 위협으로 맞대응했다. 양자는 이러한 조치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도 통상분쟁 격화를 우려하여 타협과 협상을 통한 통상갈등 완화에 나섰다. 즉 태양광 패널과 폴리실리콘 분쟁에서 ‘가격 약속’이라는 제도적 형태의 협상을 벌인 끝에 분쟁의 절충점을 찾았다. 와인 분쟁에서는 양측 관련 업계의 대화 채널을 통해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반덤핑 조사 종료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통상분쟁이 격화된 시점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과도한 통상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나. 향후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된다. 서로간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이 분명하고,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책의지와 제도적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이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지속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도 보다 심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중간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양자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2003년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 수립 이후 통상관계가 급속히 발전(서로 최대 수입대상국이자 제2대 수출대상국에 해당)한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통상분쟁은 상호간 경제통상 이익에 위배된다. 특히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틀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⁷²⁾ 중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악화일로의 대미 통상분쟁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와의 통상분쟁마저 격화된다면 중국의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EU간 통상분쟁이 전면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를 몰고 올 요인이 감지된다. 그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미·중간 301조 관련 분쟁과 달리 아직까지 중·EU간에는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직접적인 제재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EU 산업계에서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첨단 제조업 발전

72) 벨기에 주유럽연합대사관 박성준, 주현수 상무관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유럽정책연구소(CEPS) Dr. Weinian Hu 인터뷰(2018. 9. 20, 벨기에 브뤼셀).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³⁾ 이는 미국이 제기한 우려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EU 역시 ‘중국제조 2025’ 관련 불공정 보조금 조치를 제재하기 위해 대중 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WTO 제소를 확대·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요인이 있다.

다음으로 상품무역 이외에 기술이전·지재권 및 중국의 해외 M&A 투자 관련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한 규제 및 제한 조치를 통해 대중 진출 EU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EU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EU는 TRIPs 협정 위반을 근거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기술이전·지재권에 이어 중국의 해외 M&A도 최근 EU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과 지원하에 대대적인 해외기업 M&A를 실행하고 있는바, EU 기업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2017년 9월 외국인의 EU 역내 투자규제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FDI 스크리닝’ 도입을 담고 있다. 주요 인프라 시설 및 기술,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이 규정을 두고 EU집행위와 의회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이 규정이 발효된다면 중국의 반

73) European Chamber(2017), p. 1.

74) 벨기에 에그몬트 왕립연구소(Egmont Royal Institute) Mr. Thomas Renard, Mr. Bruno Hellendorff, Mr. Tobias Gehrke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중·EU간 통상갈등이 단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않으나, 상호간 통상관계의 밀접성, 중국이 처한 대외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전면적 보복 조치를 보이면서 급속히 악화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 가능성, 기술이전 및 지적권 문제, EU의 대중 해외 M&A규제 등의 요인으로 반덤핑에 집중되었던 분쟁의 양상과 성격이 이전과 달라질 조짐이 관측된다. 이에 중·EU는 상기에서 제시한 현안을 둘러싸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빚으면서도 전반적 협력구도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패널·폴리실리콘 및 와인 분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양측은 과거 통상분쟁 격화를 모면하기 위해 절충과 타협을 이룬 경험을 공유한 사례가 있다.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가. 분석 통계 및 기간

분석 통계는 UN COMTRADE⁷⁵⁾의 무역통계를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⁷⁶⁾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등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HS코드는 1992, 1996, 2002, 2007의 총 4개 버전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HS2007버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2017년 무역통계 활용을 위해 다른 버전의 보고된 통계도 같이 사용하였다. 산업분류를 위한 ISIC 역시 Rev. 1, Rev. 2, Rev. 3, Rev. 3.1, Rev. 4의 다양한 버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8버전과 유사한 ISIC 3버전을 사용하였다. ISIC 3버전과 KSIC 8버전의 경우 2단위 코드에서는 산업구분이 매우 유사하다.

75) UN Comtrade(검색일: 2018. 9. 1~ 10. 18).

76) HS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의 약자로서, 약칭 'Harmonized System, 조화제도'로 표기하고 있음.

표 4-1. HS 2단위 기준 15개 산업군 분류

HS 단위 구분

① 농림수산물(01~10), ② 음식료품 및 담배(11~24), ③ 광산물(25~28), ④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29~40), ⑤ 가죽제품(41~43), ⑥ 목재 및 종이제품(44~49), ⑦ 섬유 및 의류(50~67), ⑧ 비금속광물제품(68~71), ⑨ 금속1차제품(72~83), ⑩ 일반기계 및 장비(84), ⑪ 전기기기 및 부분품(85), ⑫ 정밀기계제품(90~91), ⑬ 자동차(87), ⑭ 기타운송장비(86, 88~89), ⑮ 기타공산물(92~97)

EU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분석을 위해 2013~17년 최근 5년간 EU의 대중국 및 대한민국 수입통계를 활용하였다. HS 4단위를 기반으로 수출유사성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HS 2단위와 15개 산업군으로 통합하여 전반적인 한·중 수출경합도를 분석하였다. HS 품목명에 대한 난해함을 개선하기 위해 HS 2단위를 기준으로 15개 산업군으로 분류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과 같다. 수출경합도 분석에 앞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경쟁력과 산업내 무역 분석에는 대세계 무역통계를 활용해야 하는바, 2012~16년 5개년 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세계 무역통계의 제약으로 산업분류가 용이하고 UN COMTRADE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SIC 기준을 중심으로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나. 주요 분석지수

1) RCA 지수

대세계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RCA 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무역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

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경쟁력지수이다.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k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CA_{iw}^k = \frac{X_{iw}^k / X_{ww}^k}{X_{iw} / X_{ww}} \quad [\text{식 4-1}]$$

RCA_{iw}^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대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

X_{iw}^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ww}^k : 전세계 k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iw} : i 국가 대세계 총 수출액

X_{ww} : 전 세계 총 수출액

2) IIT 지수

산업내무역(IIT: Intra-Industry Trade)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 보완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품목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무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내무역(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L(Grubel-Lloyd)지수를 사용한다. GL지수는 산업별·국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저조해지는 반면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GL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전되어 산업내무역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즉 GL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의 값이 0이면 수출 또는 수입에 완전 특화된 경우이고, 1이면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가 대칭적으로 같아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극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GL_{ij}^k = 1 - \left(\frac{|X_{ij}^k - M_{ij}^k|}{X_{ij}^k + M_{ij}^k} \right) \quad [\text{식 4-2}]$$

GL_{ij}^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대 j 국가 산업내무역지수

X_{ij}^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j 국가로의 수출액

M_{ij}^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j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3) ESI 지수

수출상품구조, 즉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이 양국간에 유사할수록 경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역상대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 또는 경합성을 파악하고자 수출유사성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이용한다. 수출유사성지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별로 계산한 후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을 지수화한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수록 세계시장에서의 양국간 수출경합성은 증가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양국의 수출구조가 전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수출유사성지수는 0이 되며,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면 수출유사성지수는 1이 된다. 그리고 수출유사성지수의 경우 k 를 어떻게 정의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다. - 즉 HS 2단위별로 수출유사성지수를 계산할 경우 k 를 HS 2단위, 4단위, 6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 각 단위별로 값이 다를 수 있다.

$$ESI_{ij} = \sum_{k=1}^n \text{Min} \left(\frac{X_{iw}^k}{X_{iw}}, \frac{X_{jw}^k}{X_{jw}} \right) \quad [\text{식 4-3}]$$

ESI_{ij} : i 국가와 j 국가의 수출유사성지수

X_{iw}^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iw} : i 국가 대세계 총 수출액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가. 대세계 RCA

한국의 대세계 RCA 지수를 [표 4-2]에서 검토해보면, 2016년 ISIC 2단위 기준으로 총 10개 산업에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ISIC 32)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ISIC 35)에서 상대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ISIC 33)과 코크스·석유정제품·핵 연료 제조업(ISIC 23),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ISIC 34) 등에서도 지속적인 무역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확고한 무역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SIC 32는 최근 5년간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SIC 28)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ISIC 29)에서도 소폭 경쟁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담배 제조업(ISIC 16)이 최근 5년 동안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기준 무역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으로 도약하였다. 이밖에 나머지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대체로 최근 5년간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이다. 경쟁력 하락 추세에 있던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ISIC 24)은 2014년까지는 무역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과거에 수출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제품 제조업(ISIC 17)의 경쟁력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표 4-2.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 코드 | 품 목 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1 | 농축산업 | 0.035 | 0.035 | 0.034 | 0.032 | 0.034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76 | 0.105 | 0.105 | 0.124 | 0.134 |
| 05 |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 0.650 | 0.493 | 0.430 | 0.476 | 0.504 |
| 10 | 석탄광업 | 0.001 | 0.001 | 0.002 | 0.002 | 0.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12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13 | 금속광업 | 0.018 | 0.015 | 0.018 | 0.027 | 0.015 |
| 14 | 기타 광업 | 0.097 | 0.069 | 0.082 | 0.101 | 0.081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167 | 0.159 | 0.157 | 0.157 | 0.171 |
| 16 | 담배 제조업 | 0.654 | 0.564 | 0.685 | 0.953 | 1.094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916 | 0.879 | 0.841 | 0.742 | 0.77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140 | 0.147 | 0.148 | 0.129 | 0.148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279 | 0.317 | 0.249 | 0.220 | 0.222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028 | 0.026 | 0.026 | 0.024 | 0.02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460 | 0.480 | 0.436 | 0.417 | 0.435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526 | 0.480 | 0.462 | 0.494 | 0.526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1.625 | 1.469 | 1.453 | 1.378 | 1.373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23 | 1.069 | 1.054 | 0.946 | 0.989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952 | 0.979 | 0.947 | 0.923 | 0.986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364 | 0.395 | 0.417 | 0.427 | 0.458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1.095 | 0.953 | 1.119 | 1.008 | 1.016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032 | 0.899 | 0.962 | 1.018 | 1.094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116 | 1.199 | 1.221 | 1.331 | 1.276 |
| 30 | 사무용 기계 제조업 | 0.584 | 0.615 | 0.658 | 0.675 | 0.646 |
| 31 |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82 | 1.424 | 1.249 | 1.188 | 1.165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85 | 2.870 | 2.852 | 2.644 | 2.891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938 | 1.866 | 1.789 | 1.613 | 1.419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611 | 1.648 | 1.575 | 1.480 | 1.333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589 | 2.508 | 2.480 | 2.404 | 2.153 |
| 3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0.188 | 0.181 | 0.164 | 0.160 | 0.180 |

자료: UN Comtrade ISIC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검색일: 2018. 10. 18).

표 4-3.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 코드 | 품 목 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1 | 농축산업 | 0.224 | 0.231 | 0.235 | 0.245 | 0.288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336 | 0.420 | 0.444 | 0.484 | 0.509 |
| 05 |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 0.423 | 0.379 | 0.371 | 0.343 | 0.313 |
| 10 | 석탄광업 | 0.097 | 0.071 | 0.050 | 0.041 | 0.061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16 | 0.011 | 0.007 | 0.021 | 0.020 |
| 12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13 | 금속광업 | 0.013 | 0.008 | 0.008 | 0.006 | 0.007 |
| 14 | 기타 광업 | 0.347 | 0.359 | 0.391 | 0.307 | 0.263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366 | 0.356 | 0.348 | 0.337 | 0.364 |
| 16 | 담배 제조업 | 0.172 | 0.181 | 0.173 | 0.189 | 0.207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2.877 | 2.855 | 2.771 | 2.497 | 2.655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234 | 3.213 | 3.115 | 2.603 | 2.821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117 | 2.975 | 2.789 | 2.562 | 2.641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093 | 1.002 | 0.990 | 0.956 | 0.93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509 | 0.558 | 0.588 | 0.609 | 0.605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200 | 1.034 | 0.948 | 0.975 | 0.907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189 | 0.200 | 0.212 | 0.228 | 0.277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480 | 0.469 | 0.486 | 0.461 | 0.462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261 | 1.276 | 1.235 | 1.173 | 1.149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917 | 1.978 | 1.876 | 1.951 | 1.740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513 | 0.495 | 0.664 | 0.617 | 0.587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593 | 1.567 | 1.546 | 1.541 | 1.458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0 | 1.250 | 1.218 | 1.182 | 1.221 |
| 30 | 사무용 기계 제조업 | 3.411 | 3.296 | 3.071 | 2.667 | 2.675 |
| 31 |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386 | 1.510 | 1.470 | 1.396 | 1.342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511 | 2.665 | 2.513 | 2.410 | 2.464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083 | 1.064 | 0.980 | 0.928 | 0.90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309 | 0.302 | 0.306 | 0.277 | 0.255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048 | 0.842 | 0.757 | 0.764 | 0.678 |
| 3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2.646 | 2.591 | 2.525 | 2.093 | 2.032 |

자료: UN Comtrade ISIC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검색일: 2018. 10. 18).

중국의 대세계 RCA 지수를 [표 4-3]에서 검토해보면, 2016년 ISIC 2단위 기준 총 11개 산업에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복·모피제품 제조업(ISIC 18)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무용 기계 제조업(ISIC 30), 섬유제품 제조업(ISIC 17), 가죽·가방·신발 제조업(ISIC 19),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ISIC 32), 가구·기타 제조업(ISIC 36)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ISIC 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ISIC 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SIC 2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ISIC 29), 전자기계·장비 제조업(ISIC 31) 등에서도 지속적인 무역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ISIC 2단위 RCA 기준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10개 산업과 중국의 11개 산업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 총 4개 산업이 양국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양국 모두 매우 높은 무역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중 IIT

한국과 중국의 산업내무역 정도를 산업별로 분석하기 위해 [표 4-4]에서 한·중 IIT 지수를 검토해보면, 2016년 ISIC 2단위 기준 총 11개 산업에서 양국은 IIT 지수가 0.5 이상으로 산업내무역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 산업에서 IIT 지수가 최근 5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양국간 산업내무역은 최근까지도 활성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섬유제품 제조업과 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의 양국간 산업내무역 정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이 두 부문은 모두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산업이다.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1개 산업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 4개 산업은 양국 모두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중에서도 전자기계·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산업에서는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최근 5년간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사무용 기계 제조업 등 3개 산업은 한국에는 무역경쟁력이 없고 중국에만 있는 경우로 양국간 산업내무역을 통해 중국산 최종 제품 경쟁력 향상에 우리가 기술 및 품질 측면에서 일부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4. 한·중 IIT 지수

| 코드 | 품 목 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1 | 농축산업 | 0.200 | 0.209 | 0.181 | 0.174 | 0.151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180 | 0.199 | 0.218 | 0.375 | 0.329 |
| 05 |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 0.158 | 0.097 | 0.086 | 0.097 | 0.192 |
| 10 | 석탄광업 | 0.002 | 0.000 | 0.000 | 0.001 | 0.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0 | 0.040 | 0.166 | 0.151 | 0.035 |
| 12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13 | 금속광업 | 0.730 | 0.792 | 0.845 | 0.287 | 0.395 |
| 14 | 기타 광업 | 0.571 | 0.414 | 0.528 | 0.630 | 0.497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623 | 0.582 | 0.563 | 0.623 | 0.641 |
| 16 | 담배 제조업 | 0.006 | 0.002 | 0.069 | 0.011 | 0.051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850 | 0.806 | 0.751 | 0.691 | 0.632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216 | 0.211 | 0.195 | 0.188 | 0.198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412 | 0.427 | 0.359 | 0.354 | 0.3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029 | 0.021 | 0.024 | 0.019 | 0.028 |

표 4-4. 계속

| 코드 | 품 목 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935 | 0.965 | 0.804 | 0.843 | 0.781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754 | 0.818 | 0.878 | 0.814 | 0.341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092 | 0.154 | 0.130 | 0.107 | 0.118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442 | 0.425 | 0.468 | 0.510 | 0.509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684 | 0.633 | 0.678 | 0.715 | 0.705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233 | 0.248 | 0.331 | 0.361 | 0.390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804 | 0.827 | 0.709 | 0.743 | 0.757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629 | 0.625 | 0.687 | 0.671 | 0.714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654 | 0.635 | 0.773 | 0.770 | 0.786 |
| 30 | 사무용 기계 제조업 | 0.692 | 0.707 | 0.760 | 0.759 | 0.619 |
| 31 |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862 | 0.817 | 0.757 | 0.721 | 0.795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646 | 0.573 | 0.595 | 0.689 | 0.694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297 | 0.293 | 0.348 | 0.381 | 0.365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360 | 0.319 | 0.278 | 0.308 | 0.406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090 | 0.780 | 0.796 | 0.719 | 0.314 |
| 3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0.382 | 0.397 | 0.345 | 0.313 | 0.292 |

자료: UN Comtrade ISIC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검색일: 2018. 10. 18).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가. 한국과 중국 상품의 EU 수입시장 점유율

EU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상품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절대치에 있어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5개 산업군 가운데 기타 공산품은 중국 상품이 EU 수입시장에서 무려 6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전자기기·부분품과 가축제품의 경우에도 40%를 크게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내

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의 섬유·의류와 일반기계·장비도 EU 수입시장의 35% 이상을 점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은 가죽제품과 섬유·의류 등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중국 상품 점유율 총합계의 증가세에도 잘 나타나 있다(표 4-5 참고).

| 표 4-5.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중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 | | | | |
|---|----------|----------|----------|----------|----------|
| 산업군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농림수산물 | 0.059651 | 0.055480 | 0.054991 | 0.055034 | 0.055467 |
| 음식료품 및 담배 | 0.037106 | 0.038694 | 0.039973 | 0.039673 | 0.041243 |
| 광산물 | 0.003565 | 0.004130 | 0.005829 | 0.006719 | 0.005887 |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0.116265 | 0.119780 | 0.123282 | 0.122323 | 0.129830 |
| 가죽제품 | 0.443599 | 0.432420 | 0.445047 | 0.444814 | 0.436758 |
| 목재 및 종이제품 | 0.197740 | 0.207003 | 0.206801 | 0.204495 | 0.202042 |
| 섬유 및 의류 | 0.401573 | 0.394413 | 0.385182 | 0.364030 | 0.354987 |
| 비금속광물제품 | 0.096052 | 0.098648 | 0.098619 | 0.065856 | 0.081530 |
| 금속 1차 제품 | 0.191983 | 0.212250 | 0.227698 | 0.225962 | 0.204440 |
| 일반기계 및 장비 | 0.347116 | 0.350327 | 0.344729 | 0.337925 | 0.356548 |
| 전자기기 및 부분품 | 0.430274 | 0.437996 | 0.466477 | 0.456309 | 0.462927 |
| 정밀기계제품 | 0.137291 | 0.144602 | 0.150255 | 0.155667 | 0.165138 |
| 자동차 | 0.088643 | 0.092383 | 0.089174 | 0.086625 | 0.091598 |
| 기타 운송장비 | 0.057130 | 0.045669 | 0.026804 | 0.043567 | 0.038660 |
| 기타 공산물 | 0.611511 | 0.622263 | 0.624016 | 0.614904 | 0.619846 |
| 총합계 | 0.165500 | 0.175558 | 0.199270 | 0.198349 | 0.198907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18.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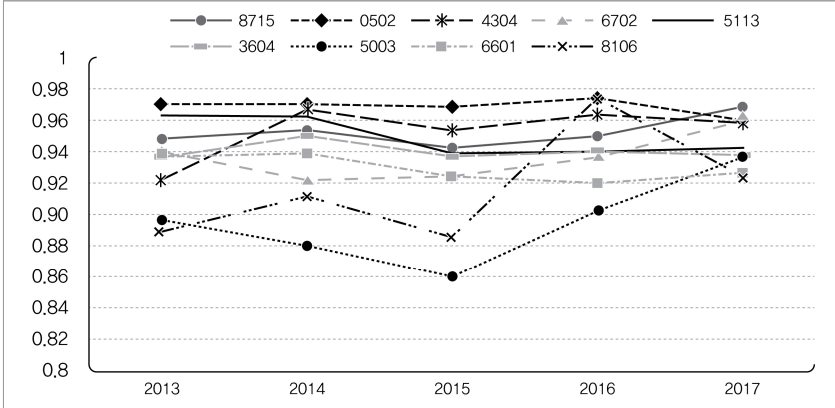
표 4-6.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한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 산업군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농림수산물 | 0.001138 | 0.001413 | 0.001519 | 0.001813 | 0.002079 |
| 음식료품 및 담배 | 0.001599 | 0.001878 | 0.002565 | 0.002795 | 0.002877 |
| 광산물 | 0.003109 | 0.004275 | 0.004465 | 0.004887 | 0.004065 |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0.023932 | 0.026762 | 0.028040 | 0.030479 | 0.037466 |
| 가죽제품 | 0.006919 | 0.003621 | 0.003187 | 0.004422 | 0.004607 |
| 목재 및 종이제품 | 0.004694 | 0.005448 | 0.005369 | 0.005479 | 0.003776 |
| 섬유 및 의류 | 0.010335 | 0.010032 | 0.009672 | 0.009362 | 0.009208 |
| 비금속광물제품 | 0.007425 | 0.007166 | 0.004830 | 0.004161 | 0.003876 |
| 금속 1차 제품 | 0.030396 | 0.029825 | 0.032505 | 0.037804 | 0.037783 |
| 일반기계 및 장비 | 0.026071 | 0.027586 | 0.028485 | 0.029307 | 0.032424 |
| 전자기기 및 부분품 | 0.050427 | 0.049969 | 0.041971 | 0.037402 | 0.039149 |
| 정밀기계제품 | 0.045030 | 0.040691 | 0.033597 | 0.026585 | 0.022677 |
| 자동차 | 0.113443 | 0.109948 | 0.100941 | 0.098309 | 0.107893 |
| 기타 운송장비 | 0.074244 | 0.087201 | 0.087028 | 0.054278 | 0.101344 |
| 기타 공산물 | 0.008667 | 0.008991 | 0.007246 | 0.009157 | 0.006667 |
| 총합계 | 0.021206 | 0.022564 | 0.024058 | 0.023912 | 0.026552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18. 10. 18).

그림 4-1.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중국 상품 점유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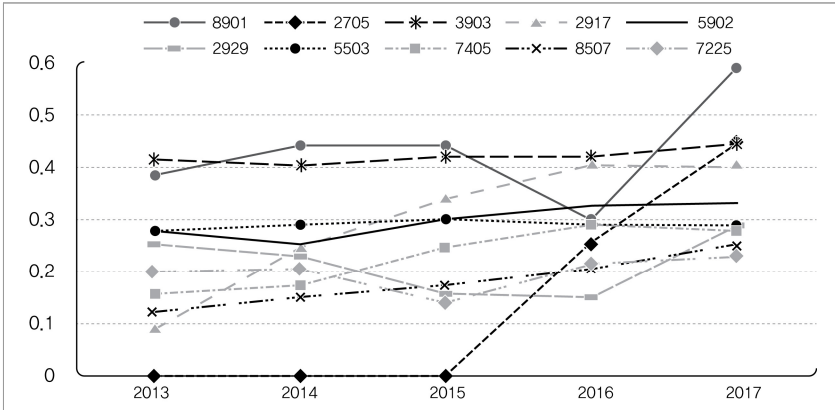


- 주: 1) 2017년 기준 EU 수입시장 내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이임.
 2) 상위 10대 품목에 HS 2822(산화코발트 등의 무기화합물 등)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도별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제외함.
 3) 품목명: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6702 인조 꽃, 잎, 과일 등으로 만든 제품,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 및 말의 털로 만든 제품), 3604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등의 화공품, 5003 건 웨이스트(waste), 6601 우산, 양산, 8106 비스무트와 그 제품.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0. 13).

그림 4-2.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한국 상품 점유율 추이

(단위: %)



- 주: 1) 2017년 기준 EU 수입시장 내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이임.
 2) 품목명: 8901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등의 선박, 2705 석탄가스, 수성가스 등, 3903 스티렌의 중합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등, 5902 나이론, 폴리에스테르 등,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 등, 7405 구리의 모합금, 8507 축전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0. 13).

한국 상품의 경우 EU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분야는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등 2개 산업이 전부이다. 이밖에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 중 EU 수입시장 점유율 3%를 초과하는 분야는 석유화학·고무제품, 금속 1차 제품, 일반기계·장비, 전자기기·부분품 등이다. 우리의 대EU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소폭 감소한 반면, 기타 운송장비 점유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자기기·부분품을 제외하고는 여타 주요 제품들의 점유율도 대체로 상승세에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EU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총 점유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HS 4단위 중국 10대 상품과 한국 10대 상품의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양국 상품 모두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EU 수입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10대 상품보다는 20%에서 60% 정도를 점하고 있는 한국 10대 상품의 점유율 상승세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양국의 점유율 상위 HS 4단위 10대 품목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

나. 한·중 수출유사성지수(ESI)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⁷⁷⁾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⁷⁸⁾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77) 김수형, 정민, 한재진(2018), pp. 5~9.

78) 강내영(2018), p. 23.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표 4-7]에서 살펴보면, 측정 기준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절대값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전체 경합도가 분명한 완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중 경합관계가 가장 심각한 전자기기·부분품의 경우 23.7%에 달했던 2013년 한·중 수출유사성지수(ESI)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18.5%에 머물렀다. 그 다음으로 한·중 경합도가 높은 분야는 일반기계·장비로 14%를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고무제품이 7.7%, 금속 1차 제품이 6.3% 정도의 순으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간 산업내무역 활성화가 중국과 한국의 무역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EU와 같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의 점유율 증가와 수출경합도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최근 동아시아 국가간 산업내무역 증가가 각국의 무역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⁷⁹⁾ 또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GVC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을 통해 유발하는 국내부가가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⁸⁰⁾

79) 나희량(2014), pp. 117~142.

80) 최낙균, 박순찬(2015), pp. 68~103.

표 4-7. EU 시장에서의 15개 산업군 한·중 수출경합도 추이(2013~17년)

| 산업군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농림수산물 | 0.001763 | 0.002172 | 0.002384 | 0.002963 | 0.002947 |
| 음식료품 및 담배 | 0.002751 | 0.002983 | 0.004000 | 0.004400 | 0.003905 |
| 광산물 | 0.006908 | 0.006912 | 0.006358 | 0.006017 | 0.006151 |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0.072950 | 0.074409 | 0.073535 | 0.075103 | 0.077109 |
| 가죽제품 | 0.002647 | 0.001385 | 0.001199 | 0.001607 | 0.001426 |
| 목재 및 종이제품 | 0.003163 | 0.003558 | 0.003623 | 0.003693 | 0.002165 |
| 섬유 및 의류 | 0.031531 | 0.031044 | 0.030357 | 0.030085 | 0.025131 |
| 비금속광물제품 | 0.013393 | 0.012490 | 0.008099 | 0.010753 | 0.006733 |
| 금속 1차 제품 | 0.061794 | 0.067741 | 0.067035 | 0.064627 | 0.063210 |
| 일반기계 및 장비 | 0.127606 | 0.130309 | 0.137574 | 0.143503 | 0.141417 |
| 전자기기 및 부분품 | 0.237183 | 0.225539 | 0.211577 | 0.192265 | 0.185093 |
| 정밀기계제품 | 0.028165 | 0.028792 | 0.029893 | 0.031455 | 0.030989 |
| 자동차 | 0.016830 | 0.017207 | 0.017926 | 0.019857 | 0.021643 |
| 기타 운송장비 | 0.008429 | 0.006389 | 0.003968 | 0.007880 | 0.005614 |
| 기타 공산물 | 0.009740 | 0.010498 | 0.009030 | 0.011755 | 0.007587 |
| 수출경합도 | 0.624854 | 0.621428 | 0.606558 | 0.605961 | 0.581119 |

주: 일시적 분류에 해당하는 HS 99는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18. 11. 1).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4-8]과 [표 4-9]에서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 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에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4-4]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8. EU의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 순위 | 산업군 | HS 4단위 | 수출경합도 | RCA(중국) | RCA(한국) | IIT |
|----|-------------|-----------|----------|-----------------|------------------|----------|
| 1 | 자동차 | 8703 | 0.000487 | 0.049892 | 1.612154 | 0.321214 |
| 2 | 자동차 | 8708 | 0.009759 | 0.557909 | 1.824375 | 0.366467 |
| 3 | 기타 운송장비 | 8901 | 0.004695 | 1.741730 | 10.429652 | 0.228376 |
| 4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2 | 0.005252 | 1.077512 | 3.900101 | 0.569536 |
| 5 | 광산품 | 2710 | 0.000497 | 0.278603 | 1.552609 | 0.070424 |
| 6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07 | 0.004289 | 1.884180 | 3.902697 | 0.519568 |
| 7 | 기타 운송장비 | 8905 | 0.000028 | 0.871431 | 9.853352 | 0.189029 |
| 8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29 | 0.012226 | 1.948055 | 4.577580 | 0.316043 |
| 9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17 | 0.017294 | 3.518763 | 1.830356 | 0.698873 |
| 10 | 금속 1차제품 | 7210 | 0.004026 | 1.780769 | 3.572106 | 0.947629 |
| 11 | 일반기계 및 장비 | 8429 | 0.000330 | 0.615716 | 2.234818 | 0.099960 |
| 12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002 | 0.000095 | 0.034242 | 0.330130 | 0.331487 |
| 13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4011 | 0.006878 | 1.311487 | 1.469997 | 0.036984 |
| 14 | 일반기계 및 장비 | 8471 | 0.014220 | 3.383959 | 0.514692 | 0.586887 |
| 15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901 | 0.000170 | 0.088638 | 1.709092 | 0.047462 |
| 16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907 | 0.000375 | 0.650309 | 2.696447 | 0.320395 |
| 17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12 | 0.001604 | 1.013183 | 1.377196 | 0.638983 |
| 18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2917 | 0.000597 | 1.140555 | 6.966486 | 0.448326 |
| 19 | 정밀기계제품 | 9013 | 0.002558 | 2.962193 | 7.038413 | 0.216208 |
| 20 | 기타 운송장비 | 8803 | 0.001091 | 0.133274 | 0.595122 | 0.255686 |
| 21 | 일반기계 및 장비 | 8409 | 0.001806 | 0.574257 | 1.269082 | 0.560068 |
| 22 | 일반기계 및 장비 | 8473 | 0.009860 | 2.479951 | 1.721994 | 0.950778 |
| 23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903 | 0.000047 | 0.208032 | 5.285307 | 0.081091 |
| 24 | 금속 1차제품 | 7219 | 0.000954 | 1.232477 | 2.318088 | 0.394118 |
| 25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37 | 0.003439 | 0.895940 | 1.099690 | 0.735506 |
| 26 | 금속 1차제품 | 7208 | 0.001307 | 0.043857 | 3.787110 | 0.542794 |
| 27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902 | 0.000034 | 0.077563 | 2.806303 | 0.011192 |
| 28 | 일반기계 및 장비 | 8414 | 0.005439 | 1.343552 | 1.115503 | 0.992731 |
| 29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1 | 0.006761 | 2.057653 | 1.858387 | 0.910965 |
| 30 | 정밀기계제품 | 9018 | 0.003606 | 0.373035 | 0.442411 | 0.882927 |

주: 1)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됨.

2) HS 9999는 일시적 분류 품목으로 제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18. 10. 18 ~ 11. 1).

표 4-9. EU의 대중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 순위 | 산업군 | HS 4단위 | 수출경합도 | RCA(중국) | RCA(한국) | IIT |
|----|-------------|--------|----------|-----------------|-----------------|----------|
| 1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17 | 0.017294 | 3.518763 | 1.830356 | 0.698873 |
| 2 | 일반기계 및 장비 | 8471 | 0.014220 | 3.383959 | 0.514692 | 0.586887 |
| 3 | 기타 공산품 | 9405 | 0.003853 | 4.106806 | 0.418031 | 0.297865 |
| 4 | 기타 공산품 | 9503 | 0.000222 | 3.821400 | 0.076272 | 0.070765 |
| 5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28 | 0.006072 | 2.417876 | 0.825420 | 0.373910 |
| 6 | 가죽제품 | 4202 | 0.000811 | 3.244463 | 0.144008 | 0.099387 |
| 7 | 일반기계 및 장비 | 8473 | 0.009860 | 2.479951 | 1.721994 | 0.950778 |
| 8 | 일반기계 및 장비 | 8443 | 0.002014 | 1.663144 | 0.364537 | 0.513389 |
| 9 | 기타 공산품 | 9401 | 0.001875 | 2.189151 | 0.392604 | 0.585304 |
| 10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16 | 0.000937 | 3.114298 | 0.379067 | 0.280118 |
| 11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04 | 0.003835 | 2.310542 | 0.893730 | 0.552107 |
| 12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29 | 0.012226 | 1.948055 | 4.577580 | 0.316043 |
| 13 | 섬유 및 의류 | 6110 | 0.000056 | 3.152466 | 0.076132 | 0.097969 |
| 14 | 기타 공산품 | 9403 | 0.000115 | 2.315438 | 0.059509 | 0.046837 |
| 15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 3926 | 0.005238 | 1.814507 | 0.630809 | 0.997482 |
| 16 | 자동차 | 8708 | 0.009759 | 0.557909 | 1.824375 | 0.366467 |
| 17 | 기타 공산품 | 9504 | 0.000250 | 3.752622 | 0.075384 | 0.030612 |
| 18 | 섬유 및 의류 | 6204 | 0.000103 | 3.163343 | 0.066902 | 0.175636 |
| 19 | 섬유 및 의류 | 6402 | 0.000073 | 4.419264 | 0.021721 | 0.026528 |
| 20 | 섬유 및 의류 | 6404 | 0.000052 | 2.734997 | 0.030419 | 0.029102 |
| 21 | 일반기계 및 장비 | 8481 | 0.004696 | 1.215312 | 0.815876 | 0.924050 |
| 22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3 | 0.002408 | 1.691534 | 0.753670 | 0.770188 |
| 23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34 | 0.002207 | 2.633937 | 3.817535 | 0.746928 |
| 24 | 섬유 및 의류 | 6202 | 0.000064 | 3.245483 | 0.071394 | 0.123083 |
| 25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18 | 0.000688 | 3.411574 | 0.427284 | 0.380268 |
| 26 | 기타 공산품 | 9506 | 0.000364 | 2.959371 | 0.145231 | 0.108424 |
| 27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36 | 0.004414 | 1.184959 | 0.943924 | 0.856709 |
| 28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1 | 0.006761 | 2.057653 | 1.858387 | 0.910965 |
| 29 |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4 | 0.003783 | 1.468382 | 0.865721 | 0.572664 |
| 30 | 일반기계 및 장비 | 8467 | 0.000274 | 2.824610 | 0.128564 | 0.116928 |

주: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검색일: 2018. 10. 18 ~ 11. 1).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 품목의 대EU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중국의 대EU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같은 저숙련 제품의 수출 비중은 최근 거듭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의 경우 중국의 경제 규모 대비 대EU 직접투자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2011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는 내수중심 성장과 기술과 서비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와 같은 전반적인 중국경제 체질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도 보다 심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 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상품무역 이외에도 기술이전·지재권 및 중국의 해외 M&A 투자 관련 분쟁의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한 규제

및 제한 조치를 통해 대중 진출 EU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EU 기업의 지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과 지원하에 대대적인 해외기업 M&A를 실행하고 있는바, 이에 EU 집행위는 2017년 9월 외국인의 EU 역내 투자규제 강화를 위한 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안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 및 기술,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규제하는 이른바 ‘FDI 스크리닝’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중 경합관계가 가장 심각한 전자기기·부분품의 경우, 23.7%에 달했던 2013년 한·중 수출유사성지수(ESI)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18.5%에 머물렀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 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에서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 정책시사점

본 연구 제3장에서 중국의 WTO 출범 이후 중·EU간 통상분쟁의 현황과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양자간에는 반덤핑 조치 중심의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와 WTO 분쟁에서도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둘러싼 상계관세 조치가 향후 중·EU간 분쟁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과 한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볼 때 한국 역시 이들과의 통상분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은 1995~2017년 말 기준 92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세계 12위)한 반면, 주요국으로부터 262건(중국에 이어 2위)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당하고 있기도 하다. 동 기간 기준 반덤핑과 달리 한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13건(중국 84건, 인도 45건에 이어 제3위)의 상계관세 조치를 받았다. 또한 [그림 3-1], [그림 3-2],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이미 주요 무역구제 조치 당사국이며, 중국, EU로부터 상당한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

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EU가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과의 통상분쟁 심화·확대는 한국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중국,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제1위), 9.5%(제3위)이며,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0.5%(제1위), 12%(제2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EU 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추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분쟁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국과의 통상분쟁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 조치 조사를 정당한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EU간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이나 ‘강철 패스너’ 분쟁사례에서와 같이 덤핑결과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 행위는 물론 정보 공개 여부와 같은 불투명한 조사절차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반대로 상대국의 불투명한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 역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EU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산업계와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중·EU간 와인 분쟁에서 살퍼본 바와 같이 양측 와인협회간 대화를 통한 협력이 분쟁 해소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한편 EU 및 중국의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무역구제 조치 또는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한 경험이 없으나 향후 주요 상대국 특히 중국과의 상계관세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상계관세 조치를 확대할 경우, 한국도 보조금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상계관세 조치는 반덤핑과 달리 교역상대국이 시행한 산업 및 수출 보조금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EU 및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어왔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 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

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미·중 무역마찰이 지속될수록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 등이 수출경기가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⁸¹⁾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GVC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의한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KOTRA·대한상의 공동주최 세미나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우리의 기회’에서 미 통상전문가 콜린슨(Nicole Bivens Collinson)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중 한국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새로운 거래선을 창출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⁸²⁾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⁸³⁾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EU 관계에서 EU 차원의 ‘FDI 스크리닝’ 제도 도입과

81) “Collateral damage predicted from US-China trade war”(2018. 7. 12, 검색일: 2018. 8. 14).

82) 「美 전문가 “미중 통상분쟁에 한국기업 반사이익 가능성도”」(2018. 8. 1, 검색일: 2018. 8. 13).

83)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CCIEE)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장기 GVC 변화에 대비하여 한·중·일 생산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함.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Zhang Yansheng 수석이코노미스트, Liu Xiandong 경제연구부 부부장 인터뷰(2018. 6. 19, 중국 베이징).

같은 투자 이슈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규정을 두고 EU집행위와 유럽의회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 중국과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EU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후속 과제로 ‘중·EU 투자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내영. 2018. 「주요 신흥 Big 4 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분석 - 중국, 인도, 인니,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Trade Focus』, 2018년 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강민지. 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제18-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수형, 정민, 한재진. 2018. 「한·중 수출 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 - 대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주평』, 18-33. 현대경제연구원.
- 김종훈. 2015.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1호.
- 나희량. 2014. 「산업내무역이 수출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아세안과 5개 주요 교역국 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8권 제4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20. No. 3.
- 문익준, 정지현, 나수엽, 박현정, 이효진. 2013.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월라, Sherzod Shadikhodjaev, 나수엽, 여지나, 마 광. 2011.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2017.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여준, 김원기, 김종혁, 권혁주, 김재천, 김정숙, 기지윤. 2016. 『2016 미국대선과 미국의 외교·경제통상정책 성향 분석 및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6-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혜신. 2016.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화 전망」. 『TRADE BRIEF』, No. 3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2월 8일)

- 조현숙. 2012.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연구-유럽 연합 반덤핑규칙 제9(5)조 해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 지만수, 박월라, 여지나, 박민숙. 2010. 「17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0-3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박순찬. 201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5-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원기. 2018. 「파리 기후협상 후속협상: 2018년 5월 회의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20. IFANS.

[중문자료]

- 英国皇家国际事务研究所,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布鲁盖尔研究所, 香港中文大学 刘佐德全球经济及金融研究所. 2017. 『中国-欧盟经济关系2025: 共建未来』.

[영문자료]

- EPRS. 2016. *Major EU-China antidumping cases*.
- European Chamber. 2013. “Chinese Outbound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 _____. 2017. *China Manufacturing 2025 Putting Industrial Policy Ahead of Market Forces*.
- European Commission. 2003. *Report for the 133 Committee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cases) against the Community*.
- _____. 2005. *23rd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munity'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04)*.
- _____. 2007a. *25th Annual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munity'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06)*.
- _____. 2007b.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Community*.
- _____. 2009. *27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munity'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 Safeguard Activities (2008).*
- _____. 2010. *Seven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European Union.*
- _____. 2011. *Eigh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European Union.*
- _____. 2012. *30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11).*
- _____. 2013. *31st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12).*
- _____. 2014.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Eleventh Report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European Union for the Year 2013.*
- _____. 2015a. *33rd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14).*
- _____. 2015b.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12th Report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European Union for the Year 2014.*
- _____. 2016.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lements for a new EU Strategy on China." Brussels. Join(2016) 30 final. (June 22)
- _____. 2017a.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urteenth Report Overview of Third Country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the European Union for the Year 2016.*
- _____. 2017b.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 _____. 2018a. *36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2017).*

- _____. 2018b.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 Short-Term Action Plan.” (July 13).
- Hanemann, Thilo and Mikko Huotari. 2017.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Europe: What Available Data Sources Tell Us.” John Seaman, Mikko Hutari and Miguel Otero-Iglesias eds.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A Country-Level Approach*.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Elcano Royal Institut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 Herrero, Alicia Garcia and Jianwei Xu. 2016.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an Europe expect trade gains?” Bruegel Working paper issue 5. Bruegel.
- Pelkmans, Jacques, Joseph Francois, Weinian Hu, Eddy Bekkers, Federica Mustilli, Miriam Manchin, Mattia Di Salvo, and Patrick Tomberger. 2018. *Tomorrow’s Silk Road: Assessing an EU-China Free Trade Agreement*. CEPS.
- Rhodium Group. 2017. “EU-China FDI Monitor: 3Q 2017 Update: Public Version.”
- Seaman, John, Mikko Huotari, and Miguel Otero-Iglesias. 2017. “Introduction: Sizing Up Chinese Investments in Europe.” John Seaman, Mikko Hutari and Miguel Otero-Iglesias eds.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A Country-Level Approach*.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Elcano Royal Institut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 WTO. 2001.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 _____. 2017. *WTO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 _____. 2018a. *Semi-Annual Report Under Article 16.4 of the Agreement European Union*. G/ADP/N/308/EU.
- _____. 2018b. *Semi-Annual Report Under Article 25.11 of the Agreement European Union*. G/SCM/N/328/EU.
- _____. 2018c. *Semi-Annual Report Under Article 16.4 of the Agreement China*. G/ADP/N/308/CHN.
- _____. 2018d. *Semi-Annual Report Under Article 25.11 of the Agreement China*. G/SCM/N/328/CHN.

[온라인 자료]

- 외교부. WTO분쟁. http://www.mofa.go.kr/www/wpge/m_3892/contents.do
(검색일: 2018. 10. 25).
- 「美 전문가 “미중 통상분쟁에 한국기업 반사이익 가능성도”」. 2018. 『MK 증권』. (8월 1일).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21&t_uid=21&c_uid=2999114(검색일: 2018. 8. 13).
- BP.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bp/en/corporate/pdf/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18-full-report.pdf>(검색일: 2018. 10. 3.)
- “Collateral damage predicted from US-China trade war.” 2018. (July 12).
<https://www.ft.com/content/374e899e-8592-11e8-96dd-fa565ec55929>.
- China Daily Asia. 2016. “China dismisses new EU anti-dumping legislation.” (November 10). https://www.chinadailyasia.com/news/2016-11/10/content_15524337.html(검색일: 2018. 9. 14).
-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Dialogue.”
<https://ec.europa.eu/research/iscp/index.cfm?pg=china>(검색일: 2018. 10. 18).
- _____. “Actions against exports from the EU.” <http://trade.ec.europa.eu/actions-against-eu-exporters/cases/index.cfm>(검색일: 2018. 9. 12).
- _____. “Actions against imports into the EU.” <http://trade.ec.europa.eu/tdi/completed.cfm>(검색일: 2018. 9. 11).
- _____. 2008. “Inaugural meeting of the EU-China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Mechanism (HLM): 25 April 2008.” (4월 25일).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8/april/tradoc_138632.pdf
(검색일: 2018. 7. 25).
- _____. 2009. “Second meeting of the EU-China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7 and 8 May 2009 in Brussels. Factsheet.” (5월 8일).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9/may/tradoc_143111.pdf
(검색일: 2018. 7. 25).
- _____. 2010. “Third meeting of the EU-China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HED) in Beijing.” (12월 21일).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0-698_en.htm?locale=en(검색일: 2018. 7. 25).

- _____. 2013. “Fourth meeting of the EU-China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HED) in Brussels.” (10월 25일).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980>(검색일: 2018. 7. 25).
- _____. 2015. “Investment Plan for Europe goes global: China announces its contribution to #investEU.” (9월 28일).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723_en.htm(검색일: 2018. 7. 25).
- _____. 2016. “EU and China discuss trade, investment, overcapacity and cooperation on state aid control at the 6th High-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10월 18일).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3441_en.htm(검색일: 2018. 7. 25).
- _____. 2017.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 (December 2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8. 9. 7).
- _____. 2018. “Factsheet: EU China relations.” (July 16). https://eeas.europa.eu/topics/external-investment-plan/34728/eu-china-relations-factsheet_en(검색일: 2018. 10. 17).
- _____. 2018. “Commission reports on latest negotiation rounds and proposals with Indonesia and China.” (July 24).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897>(검색일: 2018. 10. 3).
- _____. 2018.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366.pdf (검색일: 2018. 8. 20).
- _____. 2018. “EU and China discus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at the 7th High-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6월 25일).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873>(검색일: 2018. 7. 25).
- European Commission News archive. 2018. “Commission decides not to extend trade defence measures on solar panels from China.” (August 31).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904&title=Commission-decides-not-to-extend-trade-defence-measures-on-solar-panels-from-China>(검색일: 2018. 9. 8).
- Eurostat. 2017. “The net investment position of the EU slightly up at over €1,300 billion.” (12월 21일).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558940/2-21122017-BP-EN.pdf/ee180a2c-5dd4-44c6-b2e1-856bc8946c29>(검색일: 2018. 12. 17).

- Eurostat Database. “EU trade since 1988 by HS2-HS4.” <http://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6. 13).
-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MOFCOM Spokesman Comments on the EU’s Release of the Amendments to the New Anti-dumping Investigation Methodology.” (December 21).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policyreleasing/201712/20171202691119.shtml>(검색일: 2018. 9. 15).
- _____. 2017. “The EU released new anti-dumping regulations which mainly target China on the 19th and a report on the 20th that blames China for serious market distortion. There are comments that the EU has discussed it for years, and the new regulations serve to defend global free trade. What is the response of MOFCOM? (2017-12-21).” (December 22).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pressconferencehomepage/foreigntrade/201801/20180102695788.shtml>(검색일: 2018. 9. 15).
- _____. 2018. “MOFCOM spokesman’s comment on EU ending MIPs on Chinese PV products.”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policyreleasing/201809/20180902784346.shtml>(검색일: 2018. 9. 8).
- tni. 2017.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in the Age of Brexit and Trump.” <http://www.tni.org/en/publication/chinese-investment-in-europe-in-the-age-of-brexite-and-trump>(검색일: 2018. 9. 15).
-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8. 8. 21~24).
- _____. “Map of disputes between WTO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maps_e.htm(검색일: 2018. 8. 17, 8. 17, 9. 22, 9. 23).
- _____. “Sta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8. 6. 14).
- _____.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검색일: 2018. 6. 14).

[통계자료]

CEIC Database.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18. 7. 25).

IHS Database. <https://ihsmarkit.com/>(검색일: 2018. 7. 28).

UN Comtrade. <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검색일: 2018. 6. 13~11. 1).

[현지 면담]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Huang Ping 소장, Chen Xin 교수 인터뷰(2018. 6. 19, 중국 베이징).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Zhang Yansheng 수석이코노미스트, Liu Xiandong 경제연구부 부부장 인터뷰(2018. 6. 19, 중국 베이징).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Ramon Pacheco Pardo 교수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주유럽연합대사관 박성준, 주현수 상무관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유럽정책연구소(CEPS) Dr. Weinian Hu 인터뷰(2018. 9. 20,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에그몬트 왕립연구소(Egmont Royal Institute) Mr. Thomas Renard, Mr. Bruno Hellendorff, Mr. Tobias Gehrke 인터뷰(2018. 9. 19, 벨기에 브뤼셀).

An Analysis on China–EU Trade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eolwon Lee, Suyeong Na, and You Jin Lim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EU and analyzes major trade issues in both regions. In addition, we analyze the competition between Chinese products and Korean products in the EU market, and draw up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EU trade policies and companies.

Chapter 2 outlines the issue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EU-China high-level dialogue, as well as a brief overview of cooperation in a wide range of fields. China and the EU are becoming more closely linked not only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but also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limate change, transportation connectivity, and innovation. The EU is Chin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China is the EU's second trading partner. The EU's trade with China has exploded since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and the two entered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in 2003.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goods imports from China has exceeded the increase in exports, and the EU's trade deficit with China continues to grow. The EU's main export commodities to China are concentrated in high-skilled machinery and chemical products, while China's export items to the EU include a variety of products from low-skilled to high-skilled. However, since 2010, China's machine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exports to the EU are showing rapid growth, and the proportion of high-skilled products is rapidly expanding. In

addition, China's recent increase of direct investment in the EU not only aims at the entry of Chinese goods and services into the European market, but also to secure brand value, expertise and technology through M&As with European companies. As a result, the Chinese economy is rapidly transitioning into high-value-added industries, and China's export items to the EU are rapidly reorganizing into high value-added products.

Chapter 3 researches the major issues and prospects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remedies lik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and bilateral WTO disputes. The biggest pending issue in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is identified as the market economy status related to anti-dumping measur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he two regions will persist for the time being. If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 to expand and deepen, and the trend of global protectionism remains unchecked, more cases of trade friction will likely ensue between China and the EU. However, unlike the US, the EU is more inclined toward a dispute settlement method based on the rul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ather than unilateral sanctions. Therefore, as seen in the US-China trade dispute, it is relatively unlikely that full-scale retaliation to trade tariffs will take place.

Some changes in the nature or form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can be detected, one of which i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countervailing duty dispute related to the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EU industries are raising concer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support for Made in China 2025 could lead to over-production and thus strained trade relatio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ade in China 2025 as a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Chines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are likely to implement financial support and preferential treatment measures for each core industry sector, which could constitute unfair subsidies. This means countervailing duties could play a larger role in China-EU trade disputes, which have hitherto focused mainly on anti-dumping measures.

In Chapter 4, we consider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in the EU market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of trade competitiveness,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similarity index.

In the EU market, we can confirm that the export simil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15 industry groups we examined is definitely on the wane. According to HS 4-digit classification, the top 30 export items of Korea and China to the EU do not show a high level of similarit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higher-ranking items, and a large number of items indicate that intra-industry trade is active. In addition, Korean or Chinese products have secured global trade competitiveness in almost all of these items, and many of the top 30 items for Korea represented areas in which both countries have secured a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This shows that intra-industr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both countries and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alleviate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 increase in market share.

Finally, Chapter 5 evaluat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ina-EU trade relationship, form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goes on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may have an impact on the expansion of trade disputes with Korea, depending on future developments. Korea is ranked third in terms of the number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taken by the EU, and is also the third most targeted by China for its anti-dumping duties. In particular, Korea has been subjected to more anti-dumping measures from China than the EU. This shows how Korea can always become involved in trade disputes with China and the EU regarding trade remed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expansion of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escalation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will lead to further strengthening of trade regulations against Korea.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nges in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it will becom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isputes and accumulate experience on the logic used in these situations, thus enabling preliminary measures to prevent such trade disputes or at least minimize any potential damages.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China-EU disputes, anti-dumping measures are initiated primarily at the request of interested parties or association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rade disputes with the EU and China,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industry and foreign partners in other countries. Thi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resolving disputes after antidumping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e issues discussed in the "High-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HED)" between China and the EU. In particular, we can expect for matters of utmost importance to both regions and Korea,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facilitation and IPR, to be discussed at the 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ilateral trade issues discussed during the China-EU HED and establish a proper stance on issues that can affect Korea's interest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s the Korea-China export similarity analysis shows that intra-industr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rade competitiveness on both sides, as well as easing competition relations despit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in the EU,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hold particular significance for Korea.

Therefore, it appears inevitable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ensification of such trade disputes, and we must work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niche opportunities that appear during trade disputes, reorganization of GVCs,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8년

- 18-01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신민금·신민이
- 18-02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 최장호·최유정
- 18-03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 신헌바·나수엽·박민숙
- 18-04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혁신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태·서봉교·조고운
- 18-05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나수엽·임유진

■ 2017년

-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Bo-Young and LEE Seo Young
-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 김상겸
-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 김종덕·최보영·조문희·정민철
-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임수호·김준영·박종상·안국산·박일봉
-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과 시사점 / 오윤아·신민이·김미림
-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 YANG Hyoeun
-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합을 중심으로 / 엄준현
- 17-08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라미령
- 17-09 13·5 규칙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 이현태·이상훈·김준영·윤규섭
- 17-10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 나승권·김은미·최은혜
- 17-11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 문진영·김은미·최은혜
- 17-12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등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 이상훈·김주혜

이철원(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공저, 2017)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저, 2017) 외

나수엽(羅秀燁)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syna@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공저, 2017)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공저, 2018) 외

임유진(林瑜眞)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yjl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공저, 2016)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공저, 201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8만원 | | 4만원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계간지 |
|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 Analysis on China-EU Trade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eolwon Lee, Suyeong Na, and You Jin Lim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ISBN 978-89-322-2453-4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